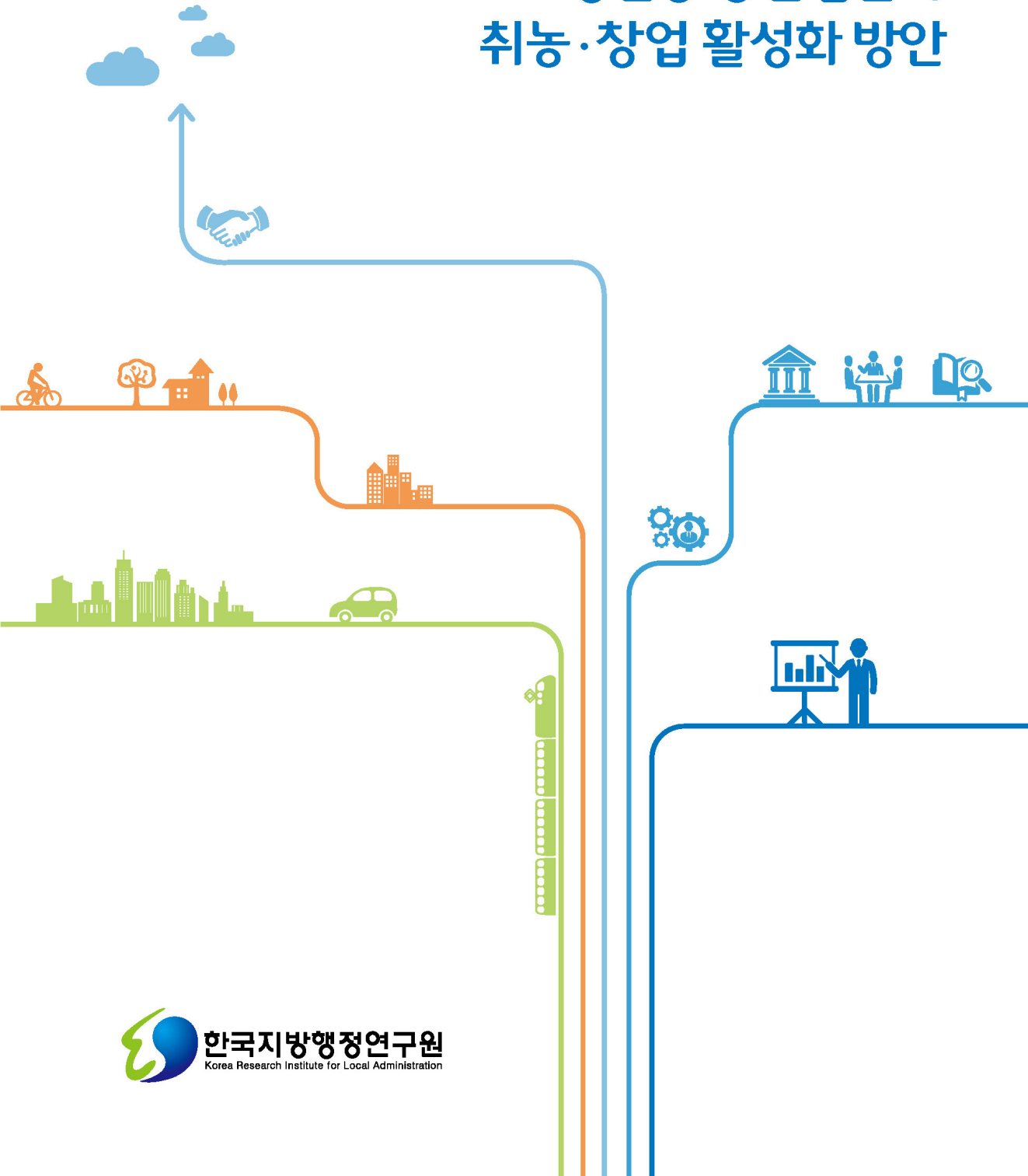


# 청년층 농산업분야 취농·창업 활성화 방안



## 연구진

오은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진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연구 요약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2000년 이후 90%대로 정점에 달한 이래로 2007년을 기점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이수행, 2012)
- 귀농·귀촌의 분위기 속에서, 전라남도는 귀촌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
- 그렇지만 전라남도 농업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농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
  - 전남 농업인구 감소: 2010년 396천명 → 2013년 371천명
  -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 2010년 38.7% → 2013년 43.7%
- 따라서 전라남도로의 귀촌 인구 증가라는 대외적 호조건을 이용하여 전남 농업분야의 활로를 되찾고 청장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전국적인 취농·창업의 증가 추세 속에서 전라남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청년층 취농·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이를 위하여 전라남도의 취농·창업 관련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앙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정책과 사업을 전라남도 맞춤형으로 변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주요 연구 내용

- 현재의 정책 여건에 부응하는 청년 농업인의 개념화
  - 청년 농업인의 연령 기준은 정책 지원의 기준과 농촌 사회 여건을 감안하여 50세 미만으로 한정
  - 산업적 측면에서 청년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력으로 한정
- 귀농·귀촌 인구의 특성과 현황 분석
  -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및 전남의 귀농·귀촌 인구 특성 파악
- 취농·창업 관련 정부·지자체의 지원정책 분석
  - 정부가 귀촌, 귀농 지원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분석
  - 강원, 경남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지원 정책을 분석
- 청년 취농·창업 지원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청년이 도시에 취업, 정착, 그리고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 분석
  - 기본방향과 핵심 전략 도출

###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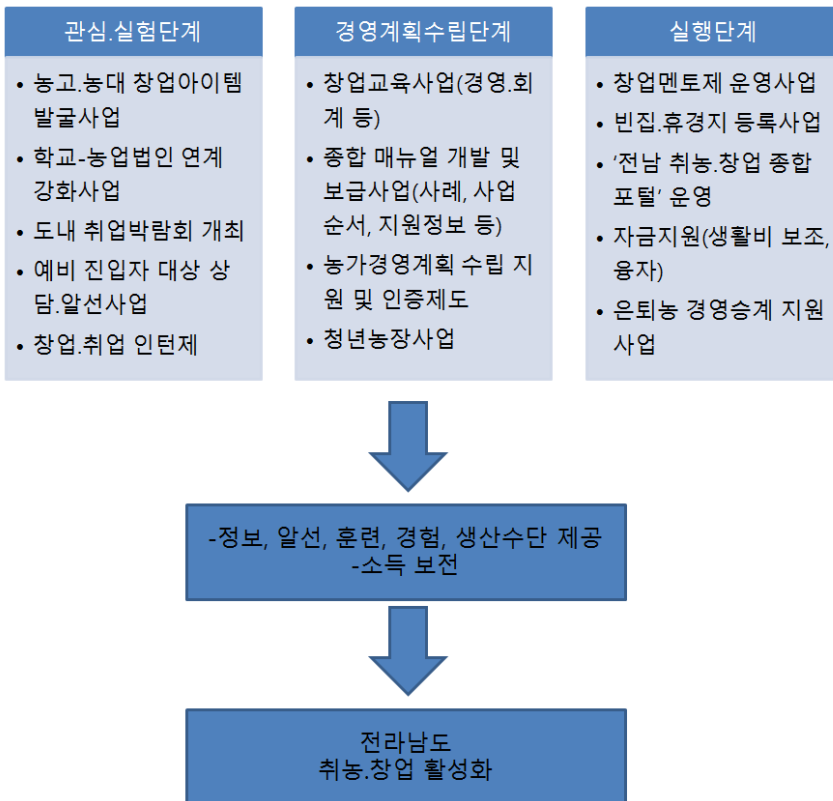
- 기본 방향
  -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의 마련: 취농·창업에 대한 관심·실험단계 - 경영 계획수립단계 - 실행단계 등 3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마련
  - 취농·창업에 대한 통합적 접근 지향: 새로운 지역사회의 적응을 위하여 생산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정주공간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수요에 대한 예비 취업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
  - 전라남도와 시·군 간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취농·창업에 대한 지원은

준비단계의 지원과 실행단계의 지원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매우 다양하고 취농·창업에 대한 지원은 시·군 경계를 넘어서 일관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군 간, 시·군과 도청 간의, 그리고 농업컨설팅회사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핵심전략

- 관심실험단계의 5개 사업, 경영계획수립단계 4개 사업, 실행단계 5개 사업을 제안

<그림 4> 전남 취농·창업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핵심전략



○ 추진조직 정비

- 시·군별 취농·창업 전담조직 설치
- 취농·창업 관련 지원 조직과 지자체 간 연계 강화
- 각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상호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취농·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진시스템을 구축

<그림 5> 전라남도 취농·창업 지원 추진 시스템



# 차 례

<b>제1장 연구의 개요</b>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7
<b>제2장 취농·창업의 개념과 의의</b> .....	9
제1절 취농·창업의 개념 .....	11
제2절 취농·창업의 사회·경제적 영향 .....	16
<b>제3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및 사례</b> 21	
제1절 중앙정부의 취농·창업정책 .....	23
1. 중앙정부의 취농·창업 관련 법률 .....	23
2. 중앙정부의 취농·창업 관련시책 .....	2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취농·창업 육성 사례 .....	44
1. 지방자치단체의 취농·창업 관련 조례 .....	44
2. 지방자치단체의 취농·창업 관련시책 .....	46
제3절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	55
<b>제4장 전라남도 여건분석</b> .....	59
제1절 귀농인구의 특성 및 현황 .....	61
1. 귀농인구의 증가 현황 .....	61
2. 귀농가구의 가구 특성 현황 .....	66
3. 귀농 전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 .....	69



4. 귀농가구의 농지임차 현황 .....	70
제2절 전라남도의 농업 현황 .....	72
제3절 전라남도 청년 취농·창업인구 지원현황·	85
제4절 예비 농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 .....	91
1. 조사개요 .....	91
2. 향후 진로계획 .....	92
3.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 .....	100
4. 농가경영 관련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	104
5. 농촌·농가경영에 대한 인식 .....	105
6.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 .....	107
7. 수요조사 결과 종합 .....	108
<b>제5장 전라남도 취농·창업 활성화 방안 .....</b>	<b>113</b>
제1절 기본방향 .....	115
제2절 핵심전략 .....	117
1. 관심·실험단계 지원 .....	117
2. 경영계획수립단계 지원 .....	120
3. 실행단계 지원 .....	124
제3절 추진조직 정비 .....	130
<b>부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귀농·창업 조례의</b>	
<b>주요 내용 .....</b>	<b>132</b>
<b>참고문헌 .....</b>	<b>137</b>





## 표 차례

<표 1> 2011년 귀촌 현황	4
<표 2> 연령대별 귀촌인구 현황	6
<표 3>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13
<표 4> 인구통계에 기초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19
<표 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4
<표 6>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내용	25
<표 7>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30
<표 8> 귀농·귀촌 교육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32
<표 9> 귀농·귀촌 교육사업(농촌진흥청)의 지원규모	33
<표 1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프로그램	34
<표 1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35
<표 12> 귀농·귀촌박람회 개최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36
<표 13>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38
<표 14> 귀농·귀촌종합센터(농촌진흥청) 운영사업의 지원내용	39
<표 15>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사업(농촌진흥청)의 지원규모	40
<표 16> 귀농인의 집 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41
<표 17>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농촌진흥청)의 지원규모	42

<표 18> 광역자치단체의 귀농·창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45
<표 19>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귀농·창업 관련 조례 제정현황 .....	46
<표 20> 광역자치단체의 취농·창업 관련 지원사업 ..	47
<표 21> 기초자치단체의 정착자금 지원사업 .....	48
<표 22>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체험 지원사업 .....	52
<표 23> 기초자치단체의 관계형성 지원사업 .....	53
<표 24> 기초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사업 .....	53
<표 25> 기초자치단체의 기타 지원사업 .....	54
<표 26> 2000년-2014년 귀농·귀촌 가구수 기준 변화·	62
<표 27> 시·도별 귀농 가구/인구(2014년) .....	63
<표 28> 2014년 전라남도 시·군별 귀농가구 및 귀농인구 분포 .....	65
<표 29> 2014년 귀농가구주의 성별·연령별 현황 .....	67
<표 30> 2014년 전입가구원수별 귀농가구수 .....	68
<표 31> 귀농 전 거주지역별 귀농가구 현황 .....	69
<표 32> 2014년도 규모별 귀농가구 현황 .....	71
<표 33> 작물재배농지의 자경·임차별 귀농가구 현황 ..	72
<표 34> 2013년 전라남도 시·군별 농가수 및 농가인구수 .....	74
<표 35> 2013년 전라남도 시·군별 경지면적 및 가구당 경지면적 .....	79
<표 36> 2013년 전라남도 생산작물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	82
<표 37>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83
<표 38> 전라남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건수 및 출하현황 .....	84
<표 39> 전남농업기술원 교육과정 .....	86





<표 40> 2015년 전라남도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취농·창업관련 주요 교육훈련 .....	89
<표 41> 잠재적 취농인 정책수요 조사 응답자 특성 ..	91
<표 42> 향후 진로계획 응답 .....	94
<표 43> 영농계획: 농축산 종사 유형 .....	94
<표 44> 영농계획: 재배/사육 영농품목 .....	96
<표 45> 영농계획: 응답자의 수입창출 형태 .....	97
<표 46> 영농계획: 취농·창업 지역의 선택기준 .....	97
<표 47> 영농계획: 희망 취농·창업지역 .....	98
<표 48> 영농계획: 희망 취농·창업지역의 선택요인 ..	99
<표 49> 영농계획: 전라남도를 취농·창업지로 선택한 이유 .....	100
<표 50> 농축산업분야 인재양성교육 참여기간 .....	101
<표 51>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 참여자 .....	101
<표 52>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102
<표 53> 대학교 정규수업이외 추가·강화 필요 교육과정 수요 .....	104
<표 54> 농가 경영관련 장애요인의 장애수준 .....	105
<표 55> 취농·창업시 예상소득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 .....	105
<표 56> 농촌 환경의 여건에 대한 인식 .....	107
<표 57> 취농·창업 이후 농가소득 발생 예상기간 ..	107
<표 58> 취농·창업 이후 농가소득 발생 예상기간 ..	108

#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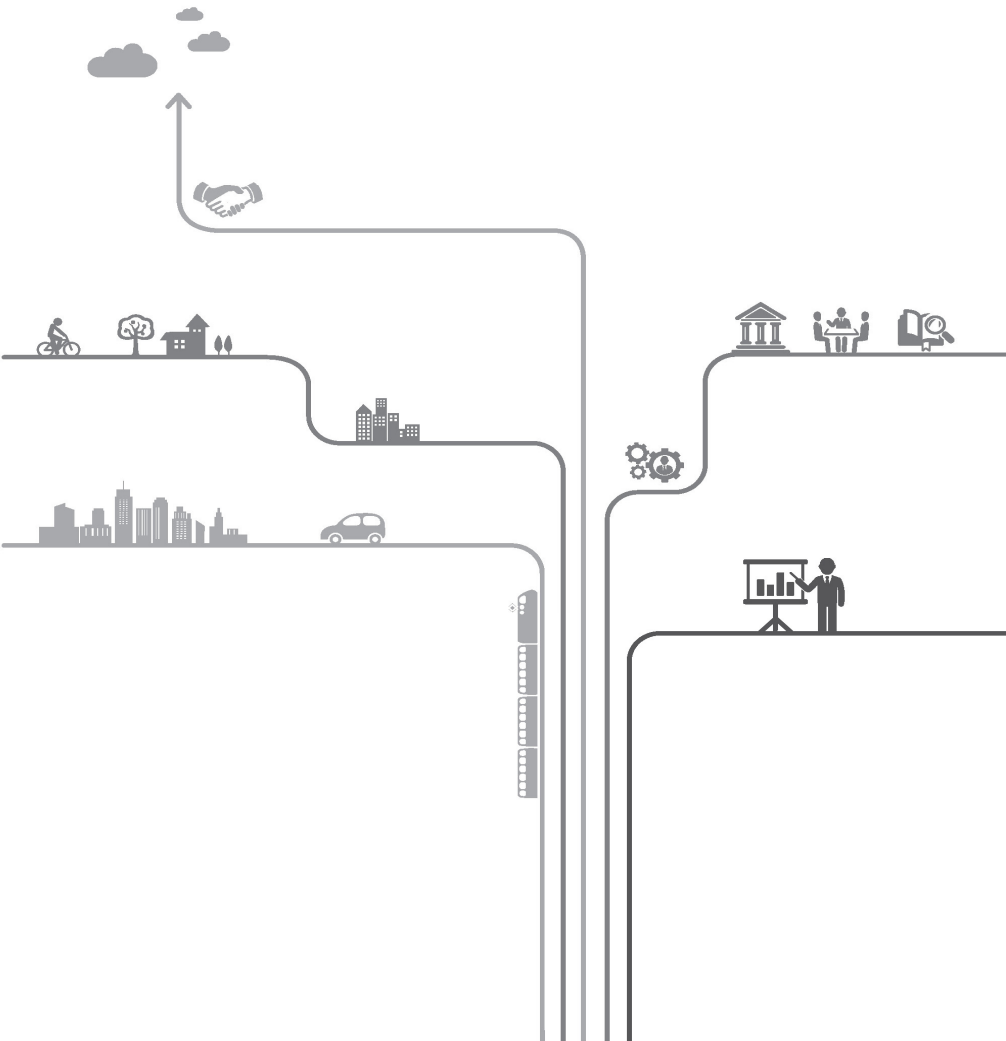
<그림 1> 과제 수행도 .....	8
<그림 2> 본 연구의 취농과 창업 .....	15
<그림 3>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	27
<그림 4>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시 단계별 고려사항 .....	28
<그림 5> 귀농·귀촌 교육단계 .....	31
<그림 6>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	36
<그림 7>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감도 .....	38
<그림 8> 2000년~2014년 귀농·귀촌 가구수 기준 변화추이 .....	62
<그림 9> 시·도별 귀농 가구수(2014년) .....	64
<그림 10> 전남지역 귀농가구의 귀농전 거주지역 분포 .....	70
<그림 11> 2008년 이후 전라남도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추이 .....	73
<그림 12> 2008~2013년 전라남도 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	76
<그림 13> 2013년 전라남도 경지면적 변화 .....	77
<그림 14> 2008년~2013년 전라남도 가구당 경지면적 변화추이 .....	78
<그림 15> 2013년 전라남도 경지규모별 농가수 .....	80
<그림 16> 설문 분석에서 이용한 2개 집단 .....	93
<그림 17> 취농·창업시 예상소득별 응답자 분포 .....	106
<그림 18> 전남 취농·창업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핵심전략 .....	129
<그림 19> 전라남도 취농·창업 지원 추진 시스템 .....	131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연구 배경

-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2000년 이후 90%대로 정점에 달한 이래로 2007년을 기점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이수행, 2012)
  - 귀농귀촌 가구수는 '05년도 1.2천호 내외였으나, '10년 4천호 수준에서 '11년 10,503호로 158% 증가(농림수산식품부, 2012)
- 청년 실업 증대, 스마트농업, 농업의 새로운 분야 발전 등으로 인하여 최근에 귀농인구가 증대되고 있음
  - 과거에는 은퇴 이후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로 인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수단으로서 취농·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귀농귀촌 가구(10,503호) 중 귀농가구가 62.3%(6,541), 귀촌가구는 37.7%(3,962) 수준으로(농림수산식품부, 2012), 귀촌가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
    - ※ 여기에서 귀농가구는 취농가구와 창업가구를 의미함
- 귀농·귀촌의 분위기 속에서, 전라남도는 귀촌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전라남도의 귀촌 가구수는 1,802호로 전체 가구수의 17.2%으로, 강원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에 해당
  - 2011년 기준 귀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남 귀촌인구가 4,393명(전체 귀촌인의 18.8%)으로, 전체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임
  - 가구 수 기준으로 상위 4개 시·도는 강원>전남>경남>경북 순이며, 인구 수 기준으로 전남>강원>경북>경남 순임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농어촌 이주경향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강원도는 수도권에 인접하면서 전원생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에 비하여, 전라남도는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1)</sup>

<표 1> 2011년 귀촌 현황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가구수	10,503	224	2,167	582	727	1,247	1,802	1,755	1,760	115	123
(비율)		2.1	20.6	5.5	6.9	11.9	17.2	16.7	16.8	1.1	1.2
인구수	23,415	470	4,040	1,196	1,727	3,043	4,393	4,031	3,980	305	226
(비율)		2.0	17.2	5.1	7.4	13.0	18.8	17.2	17.0	1.3	1.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

- 그렇지만 전라남도 농업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농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
  - 전남 농업인구 감소: 2010년 396천명 → 2013년 371천명
  -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 2010년 38.7% → 2013년 43.7%
- 따라서 전라남도로의 귀촌 인구 증가라는 대외적 호조건을 이용하여 전남 농업분야의 활로를 되찾고 청장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청장년 인구의 귀촌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인력난 해소
  - 청장년 인구의 유입을 통한 미래 농업의 발전 전략 수립

1) 농림부 2011년 조사 결과 강원도 이주가구의 70.3% 귀촌에 해당되지만 전라남도는 이주가구의 84.4%가 귀농에 해당됨



## □ 연구 목적

- 전국적인 취농·창업의 증가 추세 속에서 전라남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청년층 취농·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이를 위하여 전라남도의 취농·창업 관련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앙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정책과 사업을 전라남도 맞춤형으로 변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 청년 농업인의 개념화

-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과 형태의 귀농·귀촌 인구 중에서 청년 농업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며, 청년 농업인 (1) 연령과 (2) 산업 등 두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먼저, 청년 농업인의 연령 기준은 정책 지원의 기준과 농촌 사회 여건을 감안하여 50세 미만으로 한정
  - 일본의 경우 농촌으로 돌아오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만 45세 미만의 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림부에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을 추진할 때 45세 미만으로 한정해 왔음
  -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현실과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젊어진 현재 인구 변화를 고려하여 2013년에 기존 만45세에서 만50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음
- 둘째, 산업적 측면에서 청년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함

- 즉, 농업 이외에 다른 활동(예. 매실엑기스 등의 농산물 관련 가공업)으로 인한 가구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농업을 가구의 주요 소득원으로 하면서 다른 활동을 겸업하는 것을 뜻함

□ 귀농·귀촌 인구의 특성과 현황 분석

- 귀농·귀촌 인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농업인의 인구 변화를 파악
  - 농림수산식품부(2012)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촌인구 연령대별 비율은 50대가 33.7%, 40대가 25.5%임
  - 연경 기준으로 20대, 30대가 귀촌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40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42%에 해당됨
  - 한편, 적극적으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50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75.7%임

<표 2> 연령대별 귀촌인구 현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10,503	296	1,438	2,682	3,537	1,959	509	82
(%)	2.8	13.7	25.5	33.7	18.7	4.8	0.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

- 전남지역의 귀촌인구 현황 및 잠재적 귀촌인구의 특성 분석
  - 현재 귀촌인구의 특성(연령, 주요 업종 등)
  - 잠재적 청년 귀촌인구의 특성 분석(농대, 농고생 등의 취업 현황 등)
  - 청년 농업인의 주 유입통로 분석

□ 취농·창업 관련 정부·지자체의 지원정책 분석

- 정부가 귀촌, 귀농 지원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분석
  -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귀촌교육사업, 도시민농촌유지지원사업, 귀농인실습지원사업, 귀농귀촌박람회, 영농정착신규농업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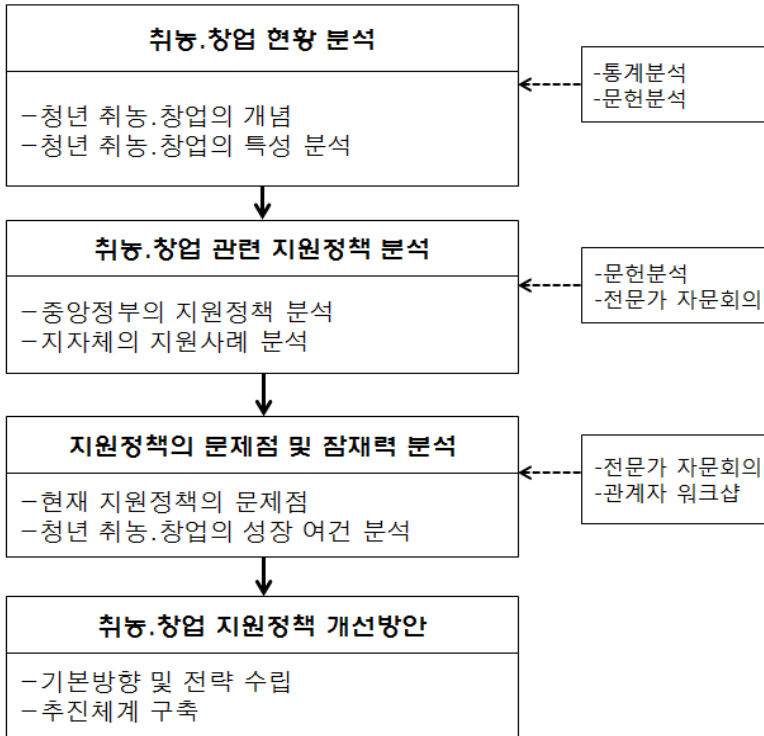
##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 강원, 경남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지원 정책을 분석
- 청년 취농·창업 지원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청년이 도시에 취업, 정착, 그리고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 분석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 간의 정합성 분석
  - 기본방향과 핵심 전략 도출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농민회 등 간의 관계 정립

## 2. 연구 방법

- 통계 및 문헌 분석
  - 전국 및 전남의 취농·창업 인구의 특성 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
  - 청년 취농·창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헌 분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
- 전문가 워크숍
  - 청년층 취농·창업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하여 정책 동향 파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전시관 건립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시행

<그림 1> 과제 수행도







## 제2장

## 취농·창업의 개념과 의의

## 제1절 취농·창업의 개념

## □ 귀농과 귀촌의 용어정의

- 귀농과 귀촌의 개념은 오랫동안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음
  - 귀농과 귀촌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제도적 학문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기존의 연구와 통계의 집계 작업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왔음
  - 그러나 귀농·귀촌이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많아지면서 귀농과 귀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귀농과 귀촌의 개념을 이주형태(U·J·I-turn)와 이주동기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손상락, 2012)
  - 이주형태를 기준으로 귀농·귀촌을 구분해보면 고향의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U-turn, 농촌에서 도시로 갔다가 고향이 아닌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것을 J-turn, 도시에서 출생 후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것을 I-turn으로 정의함
  -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동기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경제생계형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귀농·귀촌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관련 사업 및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함
  - 반면 대안가치추구형은 경제적 목적과 개인적 효용을 넘어서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이주한 경우를 의미함
  - 개인생활효용형은 농촌지역 이주동기와 이주후의 삶의 목적이 주로 자

신과 가족 개인의 생활상의 편이나 효용에 가치를 두는 경우로서 자녀의 아토피 치유, 노후의 삶을 보내기 위한 귀농·귀촌이 이에 해당함

- 귀농과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귀농과 귀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구분하고 통계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귀농·귀촌과 관련한 통계는 귀농인 통계는 통계청에서, 귀촌인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을 위한 귀농·귀촌의 정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통계청·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귀농인은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前)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現)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등록명부의 경영주, 축산업등록명부의 종축업자·사육업자·부화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를 의미함
  -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자’로 정의하되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귀농과 귀촌의 정의를 수용하여 진행하고자 함

#### □ 취농·창업의 용어정의

- 취농·창업은 단순한 귀농·귀촌의 의미를 넘어서 농업분야에서 비전을 가지고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함
  - 취농·창업은 농촌지역 거주자 역시 경제활동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농·창업만으로는 귀농인과 기존 농촌지역 거주자간의 농업분야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최근에는 농촌 지역에서 농업경영체에서의 청년층의 창업 또는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가공·출하·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모여 설립된 법인으로 농업인의 수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영농의 편익을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임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이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반면, 농업회사 법인은 출자한도 내에서 비농업인의 출자도 가능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의 형태가 ‘조합’인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해당하므로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로든 상법상 규정에 의해 설립이 가능함

<표 5>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자격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설립요건	5인 이상의 조합원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준조합원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생산기술제공자 조합법인에 농지임대, 경영 위탁자 조합법인 생산 농산물의 구입·유통·가공·수출하는 자 기타 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출자를 하는 자	농업회사법인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 규정 준용
사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의 경영, 기업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부대사업(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 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기타	가입가능생산자 단체·농협, 산림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 적용

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취농·창업은 새로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농업 생산분야에 가족 경영체의 형태로 창업하거나 또는 부모님 농장을 승계하는 행위로 한정할 수 있음(마상진·정기환, 2008)
  - 신규 취농은 단순한 농업 인력이 아니라 농업경영자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는 시각이 존재(김정호 외, 2005)
  - 취농의 경로는 농가를 상속하는 경영승계와 외부에서 진입하는 경영창업의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음(김정호 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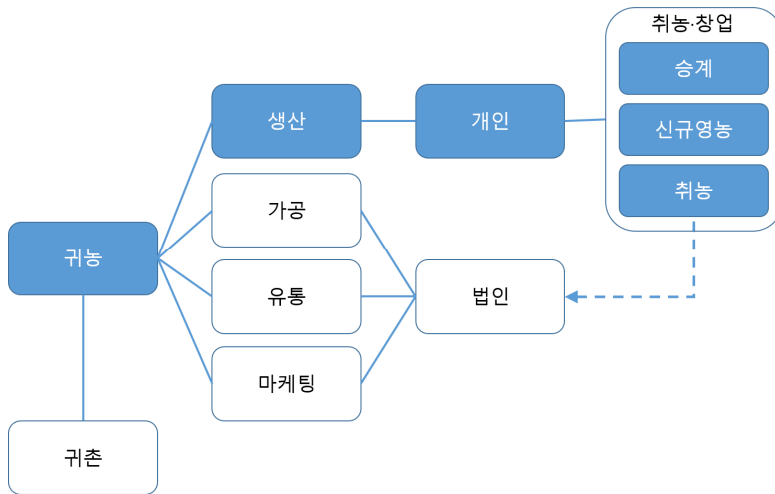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의 취농·창업의 개념

- 본 연구는 귀농·귀촌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도시거주자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의 생산분야에 종사하는 형태를 의미함(<그림 2> 참조)
  - 최근에는 고학력자의 창업농이나 도시로부터의 이직취농 역시 늘어나는 추세임(김정호 외, 2005)
- 본 연구의 취농·창업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승계영농/신규 영농을 통하여 농업 생산 분야에서 창업하는 것과 농가의 생산분야에 취업하는 취농을 포함함
  - 단순히 농촌지역에서의 전원생활영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귀촌의 경우는 취농·창업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농업생산은 하지 않고 농산물 가공, 마케팅에만 관계하는 농업경영체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농업경영체의 창업, 또는 취업

은 포함하지 않음

- 다만, 농업생산을 주로 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의 2차적인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농업활동과 함께 농업회사법인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취농의 개념에 포함시키도록 함

<그림 2> 본 연구의 취농과 창업



## 제2절 취농·창업의 사회·경제적 영향

### □ 농촌 고령화 문제 완화

- 취농·창업자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킴
  - 인구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지 증가, 버려진 폐가 증가에 따른 우범지대화 등의 문제가 농촌지역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신규 인구 증가는 버려진 폐가의 재활용, 주택의 신축 등으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의 새로운 인력 공급을 통해 농지의 활용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옴
- 노동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과수 및 특수작물 재배에서 취농·창업인이 지역농업의 후계인력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박시현 외, 2014)
  - 취농·창업인이 후계인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과수 및 특수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지역 특화작물은 해당 지역의 경제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취농·창업인을 통한 후계인력의 확보는 해당 지역경제의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포함되는 취농·창업인의 증가는 기존 농촌지역의 고령인구에 대한 이웃의 관심 증가로 이어져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중 다수는 홀로 살아가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계로 인하여 복지혜택이 미치지 어려운 경우도 많음
  - 취농·창업인의 증가는 이들 복지혜택 수혜가 필요한 노인층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가능하게 하여 장보기, 관공서 서비스 대행, 외부와의 연락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의 사회서비스를 대신 수행하기도 함

- 취농·창업인들이 마을이장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행정 보조자로서 기능하고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됨
  - 고창군의 경우 약 500여명의 마을 이장 가운데 60여명이 귀농·귀촌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토박이 이장보다 젊고 고학력자인 경우가 많음 (박시현 외, 2014)

#### □ 자본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발생

- 귀농·귀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조사결과 초기 생활비를 포함해서 평균 1억 6,61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박시현 외, 2014)
  - 최근에는 농지가격과 건축비용 상승으로 인해 귀농·귀촌하기 위해 약 2억~3억원 정도의 초기자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sup>2)</sup>
  - 귀농·귀촌인의 초기 지출 비용은 대부분 해당 농촌 지역 내에 투자되고 지역 내에서 순환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 특히, 귀농·귀촌인의 주택신축은 지역의 건설경기와 건설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박시현 외, 2014)
- 신규 주민이 농촌에 이주·정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의 자본’이 농촌에 유입되게 되고 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인 소비지출은 농촌 지역 경제의 자금흐름에 투입요소로 작용됨
  - 김경덕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 1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총생산액을 2,194만원, 지역소득을 258만원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남
- 도시로부터 이주해온 신규 인구들은 기존 주민들에 비해 도시민이 향유하는 문화소비의 경험이 많으며, 이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어 농촌지역의 경제

2) 이는 귀농·귀촌인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큼

구조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신규 진입자들의 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농촌지역의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다양한 서비스와 상업 부분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농촌지역의 경제기반의 다변화는 농업생산 및 가공에 의존적이던 경제구조를 다변화시켜 자연재해, 외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해당 지역 경제타격을 다소 완화 시킬 것임
- 또한 경제구조의 다변화는 새로운 경제 분야와 농업분야의 결합을 통해 농업 생산위주의 경제활동 구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서비스 및 마케팅 수단을 창출해내는 융합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른 재정 안정화

- 새로운 인구 증가는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지방세 증대로 이어져 해당지역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옴
  -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인구수’는 가장 주요한 기준항목으로 작용함
- 이들 신규 인구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인구수의 증가를 가져와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보건비, 일반사회복지비의 상승을 가져옴

&lt;표 6&gt; 인구통계에 기초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측정항목		측정단위
일반행정비	인건비	공무원수
	일반관리비	공무원수
	안전관리비	인구수
문화환경비	문화관광비	인구수
	환경보호비	인구수
	보건비	인구수
사회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아동복지비	아동수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일반사회복지비	인구수
지역경제비	농업비	경지면적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면적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도로관리비	도로면적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지역관리비	행정구역면적

자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1, <http://www.law.go.kr>

- 인구유입은 지방교부세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배분을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증가로 이어져 지역의 발전에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우수 인력의 유입에 따른 농업의 역량강화
  - 신규 취농·창업인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리더이자 변화를 이끌어갈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음(박시현 외, 2014)
    - 도시로부터의 유입 인구는 기존의 농민들에 비해 새로운 농법을 시도하는데 비교적 거부감이 덜함
  - 취농·창업인들은 농업을 통해 기존 도시생활에서 향유한 경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임
    - 취농·창업인들이 가지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린 마케팅 노력은 생산된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 개척에도 유용하게 활용됨

- 기존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농업기술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 관련 모임을 통해 활발한 네트워킹 활동을 전개함
- 취농·창업인의 전문성과 혁신에 바탕을 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결합하여 농촌형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일자리 같은 대안경제의 실험이 가능함(이해진 외, 2013)
  - 기존 주민과 취농·창업인이 가지는 기획력, 정보화 능력, 조직력, 외부와의 교류 능력은 지방 행정에도 도움이 됨(박시현 외, 2014)
- 물론 농촌으로 이주한 모든 도시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비즈니스 역량을 가진 혁신적 인적자본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김정섭, 2012)
  - 그렇지만 이들 신규 진입 인구의 도시 생활 경험은 농촌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융합적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 지역사회 내 갈등의 조장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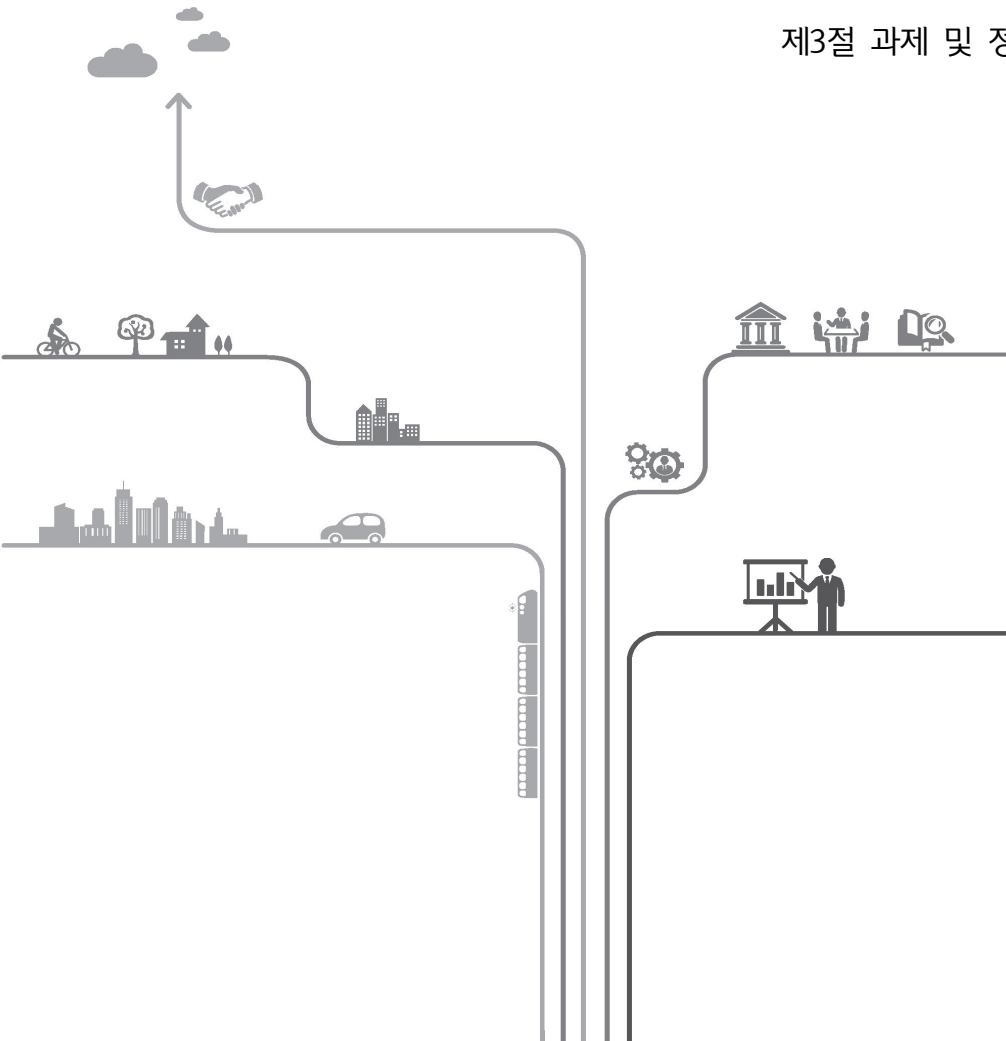
- 농촌으로의 인구유입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장할 수는 없음
- 신규 인구 증가는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올 수 있음
  - 신규 진입자와 기존 주민들과의 마찰발생, 신규 진입자가 대규모 전업농일 경우 기존 주민들의 경쟁력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박시현 외, 2014)
  - 신규 진입자에 의한 농지수요 증가는 농지가격상승을 가져오게 되어 경제기반이 열악한 기존 주민에게는 농업종사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박시현 외, 2014)



# 제3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및 사례

제1절 중앙정부의 취농·창업정책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취농·창업 육성 사례  
제3절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 제3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및 사례

## 제1절 중앙정부의 취농·창업정책

## 1. 중앙정부의 취농·창업 관련 법률

## □ 법률의 목적

- 귀농·귀촌 관련 법률은 2015년 1월20일에 제정되어 시행 예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
  - 국회 본회의 통과('14.12.29) 및 공포('15.1.20)
  - '15년 상반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7월 21일 시행 예정
-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필요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제기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여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시행
  - 그러나 아직까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농,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
- 이에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의

-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말함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함
-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귀촌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

□ 주요내용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제3조, 국가 등의 책무)

<표 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의 규정</li> <li>•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li> <li>•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li> <li>• 낙후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 이주자 우대지원</li> <li>•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li> <li>• 지원사업, 농업기술, 농촌생활정보 등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li> <li>•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비용 지원</li> </ul> <p>(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시책 추진, 박람회개최, 교육지원, 일자리알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비용, 농지·축사·양식장·어선·어구 또는 어장 매입·임차 비용,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지원, 유희농지·유희시설 중개알선 등)</p>

- 정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각각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6조,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수립·시행)

<표 10>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내용

주요내용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귀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8조, 귀농어·귀촌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10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

- 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농지·어장매입 등 지원)

## 2. 중앙정부의 취농·창업 관련시책

- 취농·창업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먼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들 수 있음
-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정책을 패키지화하여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그간 문제시되었던 귀농인구의 정착률을 높이고, 귀농단계에 알맞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 전·후(정보탐색·결심·실행·정착 단계)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제시
  - 귀농·귀촌 종합대책에는 농촌이주를 결심한 사람들의 주택 마련·창업을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사업과 영농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컨설팅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3>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9)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크게 농업이차보전사업과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분 가능
  -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교육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사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사업 등으로 구성됨

<그림 4>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시 단계별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1단계 귀농탐색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지자체 귀농 협의 회 및 농업관련 기관, 선배 귀농인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 보 수집
2단계 귀농결심 (가족합의)	농촌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선뜻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
3단계 귀농교육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귀농·귀 촌 교육 이수
4단계 영농기술	대상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우수 귀농·귀촌 농가 견학,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충분한 영농기술 습득
5단계 정착지 물색	작목선택과 기술 습득 후에는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 및 선정 작목의 적합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또는 임차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 보고 선택
7단계 영농계획 수립	끝으로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은 필수, 농산물을 생 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 정도 걸리므로 가격변동이 적고, 유통이 확보되고 영농 기술과 최소 자본이 투입되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 수립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고용노동부가 취농·창 업 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 중임
  -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귀농·귀촌인의 교육과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사업 등을 운영

- 고용노동부는 농산업인턴제 등을 농해서 농산업 분야의 창직·창업에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인턴기회를 제공

### 1)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목적

-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
  - 농협자금을 활용하고 정부에서 이차차이만 보조하는 이차보전사업

#### 주요사업내용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3억원 한도 내)
  - 주택구입(신축)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5천만원 한도내)
- 지원조건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 창업 2%, 주택구입·신축 2.7%(65세 이상은 2%)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자격
  - 농업 전업(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농촌비즈니스 겸업)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로 선정
  - 이주기한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규모

○ 2015년도 지원규모 : 1000억원('14년도 : 700억원)

<표 11>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구 분		'13	'14	'15	비고
농업 이차 보전 사업	○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 최대 3.5억원 융자 지원 (창업 3억원, 주택구입 5천만원) - 금리 : 창업2%, 주택 2.7%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예산 - 33.7억원 (융자규모) - 600억원	예산 - 38.7억원 융자규모 - 700억원	예산 - 64.8억원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

2) 귀농·귀촌 교육사업(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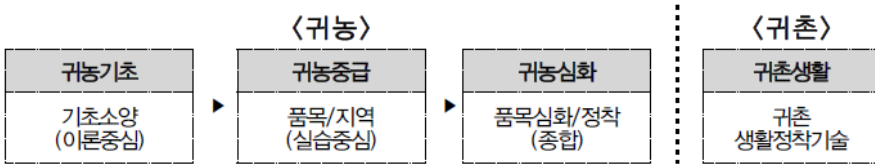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지원
-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운영
  - 교육비 70~80% 국고지원

주요사업내용

- 교육 수요자의 귀농·귀촌 준비단계를 반영하여 매년 공개모집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귀촌 분야별,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우수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

- 이론 강의, 현장실습 및 견학, 토론 등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

<그림 5> 귀농·귀촌 교육단계



- 현장수요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2030세대 취·창업 지원 교육 시행
  - 6차산업, 특정품목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특수 직업군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비용은 2개월 합숙의 경우 총 310만원이 소요되나 정부에서 260만원을 지급해 주고 본인부담금은 50만원임. 주말(1박2일, 8회) 교육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25만원, 1주일과정은 15만원임
  - 국고 70 ~ 80%, 자부담 20 ~ 30%

〈2030세대 취창업 지원 교육〉

목적

- 귀농·귀촌 취·창업에 관심있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귀농·귀촌 관심 및 실행 유도
- ① 취·창업 맞춤형 교육
  - 귀농·귀촌 취·창업에 관심있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귀농·귀촌 관심 및 실행 유도
  - ② 대학교 정규교과 개설
    - 귀농·귀촌 창업에 관심 있는 4년제 대학교
    - 비농학계열 위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및 정규과목에 접목·운영
    - 2~3학점으로 편성, 현장체험과 창업준비 등 참여유도형으로 운영
  - ③ 창업계획서 공모전
    - 농산업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농식품산업 창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추진

지원규모

○ 2015년도 지원규모 : 29.3억원('14년도 : 24.5억원)

<표 12> 귀농·귀촌 교육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구 분		'13	'14	'15	비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 귀농·귀촌 교육	21.1억원	24.5억원	29.3억원	민간
	-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운영	-	-	-	
	- 3주~3개월 과정	2,000명	2,350명	2,800명	
	- 교육비 70~80% 국고지원				

3) 귀농·귀촌 교육사업(농촌진흥청)

사업목적

○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농촌생활과 농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주요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 대상 영농정착교육
  - 기술보급전문가 활용(도원, 시·군센터)농업기술과 귀농정보 교육
  - 교육수료자 추수교육(주요 영농시기별 추진)
- 중앙(농촌진흥청)-도(도원)-시·군(시·군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한 기초영농교육
- 귀농(희망)인-귀농 희망지역 기술보급전문가-전문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 농업기술, 농업경영, 창업까지 일관화한 맞춤형 학습 실시
- 사업개요 : 4,000명/68개소(도농업기술원 8, 시·군농업기술센터 60)
  - 귀농·귀촌인(5년 이내)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함

지원규모

<표 13> 귀농·귀촌 교육사업(농촌진흥청)의 지원규모

구 분	사업량	소요예산	비고
귀농·귀촌교육사업(농촌진흥청)	4,000명	1,000백만원(국비)	4,000명×250천원×2주×50%

4)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목적

- 인구 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 제고 및 귀농·귀촌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개 시·군(신규12, 계속38)

- 지원규모 : 시·군당 3년에 걸쳐 총 6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동 사업비로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단계별 사업내용
  - (관심단계)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상담 등 정보제공), 출향인사 등 DB 구축, 도시민 농촌 초청,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공
  - (준비단계) 농촌문화생활 교육·체험, 예비귀촌인 농사 체험,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전원택지, 빈집, 농지 정보 등 제공
  - (실행단계) 귀농인의 집 건립,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집들이 비용 등 지원
  - (정착단계) 인턴제, 멘토링제 운영, 일자리 알선 등

<표 14>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프로그램

단계	프로그램
1단계 정주의향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 귀농인 등을 활용한 상담가 배치 등</li> <li>- 귀농·귀촌 매뉴얼 제작·비치</li> <li>- 출향인사 등 DB구축 및 유대강화</li> <li>- 관내투어(농지, 지역별 재배품목 설명)</li> <li>- 관내 지역·유망작목, 성공사례 등 홍보</li> </ul> </li> <li>• 정착 귀농인, 공무원, 단체 등 협의체 구성</li> </ul>
2단계 이주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문화·체험/체득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및 귀농인 대상 워크숍 등 교육</li> <li>- 예비귀농인 농사체험</li> <li>- 관내귀농학습모임 등 동호회 안내·상담</li> </ul> </li> <li>• 농촌 빈집 등 부동산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택지, 빈집정보, 농지, 임야 등</li> <li>- 빈집 체재형 주말농원 연계 지원</li> </ul> </li> </ul>
3단계 이주실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인의 집, 창업지원사업 등 실질 정보 제공</li> <li>- One-Stop 행정처리반 운영</li> <li>- 농촌형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li> <li>- 관내 사회적 기업 등 참여 안내</li> </ul> </li> </ul>

단계	프로그램
4단계 이주정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착륙 적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도시민 멘토링제 운영</li> <li>- 귀농인 적응(선도농가 실습 등) 프로그램 운영</li> <li>- 귀촌인 만남의 장 운영</li> <li>- 귀농·귀촌자 학습모임 구성·운영</li> <li>- 귀농·귀촌인 적응교육 알선 및 위탁</li> </ul> </li> </ul>

자료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http://www.returnfarm.com/index.do>).

지원규모

○ 2015년도 지원규모 : 50.9억원('14년도 : 40.9억원)

<표 1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구 분		'13	'14	'15	비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 시·군당 3년간 6억원 지원 (국고 50%, 지자체 50)	35.8억원 :35개 시·군	40.9억원 :40개 시·군	50.9억원 :50개 시·군	지자체· 민간

5) 귀농·귀촌박람회 개최사업(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목적

- 귀농·귀촌 관심·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부정책, 지자체 정보 및 상담·체험 기회 등 제공
  - '11년부터 매년 1회씩 박람회 개최
  - '14년 실적 : 방문객 3만 여명, 귀농·귀촌 수기집 5천부, 정책리플릿 2만 부, 귀농·귀촌 종합가이드북 1만부 배포 등

주요사업내용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안내, 전국의 시·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에게서 주택, 농지, 품목 등 지역 정보 습득기회를 제공  
 하고, 귀농·귀촌 유형별 소그룹 강의 제공  
 - 귀농·귀촌 종합정보 제공 및 체험의 장 마련

**<2015년 박람회 개최 계획>**

- 기 간 : '15. 6. 5.(금) ~ 6. 7.(일)
- 장 소 : 서울무역전시장(서울 3호선 지하철 학여울역 앞)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참 석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귀농·귀촌교육기관 등
- 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100%)

<그림 6>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지원규모

- 2015년도 지원규모 : 4억원('14년도 : 4억원)

<표 16> 귀농·귀촌박람회 개최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구 분		'13	'14	'15	비고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 귀농·귀촌박람회	5억원	4억원	4억원	민간



## 6)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지원센터 건립·운영
- 센터안의 귀농희망자와 일손 부족 농가를 연계하여 마을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정착 유도

## □ 주요사업내용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건립)에 필요한 하드웨어지원 사업이며, 준공 후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통한 각종 수익·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입주민의 모집과 조기 적응 및 향후 안정적 정착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확보·배치할 것
- 사업대상자 : 시장 및 군수
- 지원자격 : 귀농 또는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군으로 한정함
- 지원조건
  - 개소당 80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15년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
  - 1년차 : 40억원(국고 20억원, 지방비 20억원),
  - 2년차 : 40억원(국고 20억원, 지방비 20억원)
- 사업내용
  - 주거공간 30세대 이상, 세대별 텃밭(300㎡내외), 공동 실습 농장, 시설하

우스, 공동퇴비장, 공동자재보관소,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쉼터 등 설치

<그림 7>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감도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 면적 > 26,400㎡
- 주요 시설 > 체류형 주택 20동(20세대), 세대별 정원, 공동 퇴비 및 사육하우스,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다목적 교육관 등
- 완공시기 > 2014년 하반기 예정
- 입주시 예정 > 2014년 하반기 예정
- 입주자문의 > 041-750-3528

<금산군>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 면적 > 34,278㎡
- 주요 시설 > 체류형 주택 30동(30세대), 세대별 정원, 공동체 실습농장 및 사육하우스, 공동 농기재 보관소, 공동 퇴비장, 교육시설, 쉼터 등
- 완공시기 > 2015년 하반기 예정
- 입주시 예정 > 2015년 하반기 예정
- 입주자문의 > 033-430-2673

<홍천군>

□ 지원규모

○ 2015년도 지원규모 : 40억원('14년도 : 80억원)

<표 17>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구분	'13	'14	'15	비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80억원 -2개시·군	80 억 원 -2개시·군	40억원 -2개시·군	지자체

## 7)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사업(농촌진흥청)

## □ 사업목적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귀농탐색 단계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며,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 대한 맞춤형 정보·상담 및 교육을 제공
  - On-Off Line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방문)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 주요사업내용

-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크게 상담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으로 구성
  - 상담지원은 중앙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품목 등 지역 정보 상담 제공
  - 교육지원은 정부 및 지자체 귀농·귀촌 정책, 기본공통 및 주문형 교육 등
  - 또한 현장전문가 1:1 상담을 지원 : 농업 마이스터, 귀농 선배 등이 준비 단계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실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상담·자문 서비스를 현장에서 농촌 정착 시 까지 제공
  - 희망 지역과 품목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가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 포함하여 전문가 인력풀 1,000명 확보 계획

&lt;표 18&gt; 귀농·귀촌종합센터(농촌진흥청) 운영사업의 지원내용

구분	내용
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정보 제공 : 중앙·지자체 정책, 주택구입·창업자금 융자, 귀농·귀촌 교육, 농지·주거지, 농가실습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li> <li>• 지역정보 제공 : ‘시·군 상담의 날’을 정례화 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관심 지역의 전문가와의 상담기회 제공</li> </ul>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방문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기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정보·상담서비스 제공 및 정부정책 강의</li> <li>•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정책 등 ‘지역 귀농·귀촌 강좌’를 정례화하여 지역정보 상시제공</li> <li>• 특강형식의 다양한 주제로 호응도가 높은 ‘소그룹강의’를 ‘15년부터 주간반 운영 등 확대</li> </ul>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귀농 및 귀촌 지원사업의 정부지원,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보탐색단계에서는 귀농·귀촌 매뉴얼과 성공사례·온라인 교육·농가체험 프로그램 등 기초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결심단계에서는 주요 지역과 작목 등 맞춤형 상담·교육 및 귀농인의 집 체험기회 등 맞춤형 상세정보 제공
  - 실행 및 정착단계에서는 영농실습과 농산업 인턴제도 지원·주택 및 농지 알선·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멘토링 제도 등 창업·정착을 위한 지원 제공

지원규모

- 2015년도 지원규모 : 10억원

<표 19>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사업(농촌진흥청)의 지원규모

구 분		'13	'14	'15	비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 귀농·귀촌종합센터('15 신규) - 인건비 236(5명), 전문가료 320, 시스템 200, 홍보 67, 운영비 등244	-	-	10억원	민간

8) 귀농인의 집(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 까지 거주하거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임

### □ 주요사업내용

- 지자체에서 빈집 소유자의 승낙 하에 빈집을 수리하여 귀농인에게 임대해 주고 일정기간(약5년) 후에 소유주에게 반환
  - (입주자 비용) 10만원~20만원/월, 1~2만원/일
  - (운용 시·군) 41개 시·군, 141개소('15.2월 현재)
- 2009년 100개소를 건립, 앞으로 3년 동안 총 300개소 건립 예정
  - '15년 : 70개소, '16년 : 130개, '17년 : 100개 건립
- 효율적인 귀농인의 집을 운용하기 위해서 건립방식을 다양화함
  - 시장·군수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보건소 등 시·군 소유 건물 등 리모델링
  -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임차하여 수리 등

### □ 지원규모

- 2015년도 지원규모 : 10.5억원

<표 20> 귀농인의 집 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규모

구 분	'13	'14	'15	비고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 귀농인의 집(70개소) - 70개소×30백만원×50%	-	-	10.5억원	지자체

## 9)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농촌진흥청)

### □ 사업목적

-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은 전국단위 귀농인 교육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기존 농식품부 '귀농인 실습지원사업'이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 '귀농인 현

장실습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

주요사업내용

- 영농체험을 위한 농장입주 현장 실습교육 지원
  - 선도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의 농장에 입주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 과정을 전수받음
  - 시험연구기관과 연계한 연수기회 확대로 성공적 귀농 기술 지원
  - 귀농인-귀농지역(시·군)-전문 농업인과의 멘토링제 운영
  - 현장실습장 운영을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으로 연계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지원 대상자 :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 선도농가(선도실습장) 자격요건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 지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연수생 : 월 80만원, 5개월 (단, 20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선도농장 : 월 40만원
- 연수기간 : 5개월 원칙
- 실습인원 : 560명

지원규모

<표 21>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농촌진흥청)의 지원규모

구 분	사업량	소요예산	비고
귀농인현장실습지원사업 (농촌진흥청)	560명	1,680백만원(국비)	560명×1,200천원×5개월×50%

## 10) 농산업인턴제(고용노동부)

 사업목적

- 농산업 인턴제는 농산업 분야의 창직·창업에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주요사업내용

- 연수시행자(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영농농가, 농업법인)와 인턴약정을 맺고, 농산업 분야의 인턴을 수행하며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 및 영농실무를 습득하고, 운영기관에서는 전문교육 및 컨설팅, 촉진수당 등을 지원
- 농산업인턴제 운영계획
  - 2011년부터 정부일자리사업 통합 원칙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총괄
  -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농산업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농산업인턴의 전반적인 실무 추진
  - 귀농인 농업인턴제도 통합운영: 농산업인턴 속에 귀농 인턴 포함 효율성 제고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시행자 : 신지식인 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인턴희망자 :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산업 분야 창직·창업 희망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3학년) 및 농업계 대학에 휴학하거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 재학생
- 지원형태 : 국비 100%
- 지원내용
  - 연수시행자 : 인턴 훈련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월 최대 80만원 한도)

지원, 농가 당 2인까지 채용 가능

– 인턴희망자 : 연수기간동안 약정임금 지급

○ 연수기간 : 6개월간(전일제)

○ 실습인원 : 원예작물 및 축산물 250명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취농·창업 육성 사례

### 1. 지방자치단체의 취농·창업 관련 조례

- 2007년 강진군에서 최초로 귀농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5년 현재 122개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취농·창업 관련 조례를 제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도시민들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
- 2015년 현재 귀농·귀촌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총 10곳으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임
  -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귀농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2009년 제정되었으며, 뒤를 이어 충남, 경남, 제주, 충북 순으로 제정



&lt;표 22&gt; 광역자치단체의 귀농·창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종류	법규명	제/개정일	제정일
강원	조례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2015-01-02	2012-12-28
경기	조례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	2015-04-30	2013-08-05
경남	조례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2015-01-02	2010-02-11
경북	조례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2009-06-11	2009-06-11
울산	조례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2015-03-05	2015-03-05
전남	조례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2015-02-26	2012-04-05
전북	조례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2015-05-01	2012-06-08
제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2014-08-13	2010-04-21
충남	조례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2015-02-23	2009-07-20
충남	조례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2014-12-30	2011-11-10
충북	조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2015-01-01	2010-01-01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2015년 5월 31일 기준

- 10개 광역자치단체의 귀농자 지원 관련 조례 상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농촌 지역에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을 통해 미래 농업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으로 귀농하는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귀농인”이라 함은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해당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뜻함(경상북도 귀농자 지원 조례)
- 또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해당자치단체의 책무, 귀농인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귀농자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교육 및 훈련, 귀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귀농·귀촌자의 지원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는 총 111개로, 충남은 전체 기초자치단체가 귀농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 충남에 이어, 전남, 전북, 충북, 경북 순으로 조례 제정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귀농·창업 관련 조례 제정현황

구분	광역자치단체 단위 조례(개)	기초자치단체수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례(개)	조례 제정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수	비율(%)
서울	-	25	-	-	-
부산	-	16	-	-	-
대구	-	8	-	-	-
인천	-	10	1	1	10
광주	-	5	-	-	-
대전	-	5	-	-	-
울산	1	5	-	-	-
세종	-	1	-	-	-
경기	1	31	3	3	10
강원	1	18	12	12	67
충북	1	12	11	11	92
충남	2	15	16	15	100
전북	1	14	13	13	93
전남	1	22	21	21	95
경북	1	23	22	21	91
경남	1	18	12	12	67
제주	1	2	-	-	-

주: 충남 금산군, 경북 봉화군의 경우 귀농 관련 조례가 2개 제정되어 있음  
 충남 금산군: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북 봉화군: 봉화군 귀농정책인 지원 조례,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2015년 5월 31일 기준.

## 2. 지방자치단체의 취농·창업 관련시책

### 1) 광역자치단체의 관련시책

- 광역자치단체는 정부계획과 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된 사업별로 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전개
-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귀농 및 귀촌으로 특화된 시·군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정보제공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

- 홍보설명회 및 초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 전남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귀농인턴 및 실습과 관련된 교육사업도 수행
  -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창업 프로젝트 공모 등의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특징적 사업이라 할 수 있음

<표 24> 광역자치단체의 취농·창업 관련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실시지역-금액(만원))
정착자금지원	창업자금 보조	귀농 정착지원사업(경북·경남-500)
	창업자금 용자	농어촌진흥기금 귀농인 용자(전남-1억원 이내)
	주택수리 보조	주택수리비 보조(전남-500)
교육, 체험 지원	교육비 보조	광주전남귀농학교 귀농철학교육비 보조(전남-35)
	귀농인턴	귀농인턴 지원사업(경북)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경남)
	영농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귀농과정(경북) 과학영농귀농학교 도비 운영(경남)
관계형성 지원	간담회, 포럼	귀농·귀촌포럼(경북) 시·군 귀농·귀촌자생단체와의 간담회(경북)
	단합대회	귀농·귀촌 한마당 잔치(경북)
	멘토링	귀농인 멘토 및 전담직원제(전남)
정보제공	홍보설명회	찾아가는 귀농설명회(전남) 서울마을조성 홍보 및 설명회, 귀농박람회(경남)
	초청프로그램	귀농학교 교육생 초청 농사체험(전북)
	지역안내	“귀농하기 좋은 마을” 선정(경남)
	빈집정보	웰빙 전남 홈페이지 내 주택·토지정보(전남)
	홈페이지	다음카페 운영(경남) 웰빙 전남 홈페이지 운영(전남)
기타	사회적 일자리	귀농·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전북) 귀농·귀촌 창업 프로젝트 공모(전북)
	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전북) 귀농·귀촌상담센터 서울사무소(전남)

자료: 황정임(2012), 57쪽

## 2) 기초자치단체의 관련시책

### □ 특징

- 기초자치단체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정주관련 지원책과 특화된 영농기술 확보 및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 추진
- 기초자치단체 사업 역시, 정착 자금 지원, 교육 및 체험 지원, 관계 형성 지원, 정보 제공, 기타 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함

### □ 정착자금지원

- 기초자치단체의 관련시책은 정착자금 지원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정착자금 지원은 주로 영농창업자금 보조, 정착자금 지원사업으로 구성
  - 주택 및 농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 및 수리비 지원, 농지구입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 및 세금제원 등이 있음
  - 또한 자체 조례를 지정하여 빈집 수리비, 자녀 학자금, 출산 장려금 등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
- 기타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 지원사업이 추진 중임

<표 25> 기초자치단체의 정착자금 지원사업

구분	실시지역(금액·만원)
이사비용 지원	• 경기 : 연천(100)
	• 강원 : 원주(200)
	• 충북 : 충주(100)
	• 전북 : 정읍(50), 남원(100), 완주(50), 순창(100)
	• 전남 : 진도(100)

구분		실시지역(금액-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 : 영천(100), 의성(20~60), 예천(100), 봉화(100), 울진(100)</li> <li>경남 : 밀양(30), 하동(30~70), 창녕(30), 함양(30)</li> </ul>	
신규 주택 지원	주택신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 연천(1,000)</li> <li>전북 : 완주(500), 임실(500)</li> </ul>	
	주택신축설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 : 홍천(50)</li> <li>경남 : 의령(50)</li> <li>전남 : 영광(건축설계비 50%)</li> <li>경북 : 울진(100), 상주(건축설계비 50%)</li> <li>경남 : 창녕(100)</li> </ul>	
		한옥신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남 : 해남(보조 4,000, 용자 4,000)</li> </ul>
주택 개량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 연천(100)</li> <li>강원 : 홍천(500), 양양(450)</li> <li>충북 : 충주(200), 제천(500), 단양(200)</li> <li>충남 : 서천(400), 청양(500), 홍성(500), 예산(500)</li> <li>전북 : 군산(500), 익산(500), 정읍(500), 김제(500), 완주(500), 진안(500), 장수(500), 임실(500), 고창(500), 무주(500)</li> <li>전남 : 여수(500), 나주(500), 광양(500), 담양(500), 보성(500), 장흥(500), 해남(500), 영암(500), 함평(500), 영광(500), 장성(500), 진도(500)</li> <li>경북 : 영주(300), 상주(500), 문경(400), 군위(300), 청송(300), 영양(400), 고령(300), 성주(350), 예천(400), 울진(400)</li> <li>경남 : 밀양(240), 의령(150), 산청(300), 합천(500)</li> <li>제주 : 특별자치도(400)</li> <li>인천 : 옹진(500)</li> </ul>	
		주택정비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 : 영월(50)</li> </ul>
		전입학생 주택마련 준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 : 영월(대학생-50만원/년, 고등학생-60만원/년)</li> </ul>
		빈집수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 : 옥천(500), 괴산(200), 음성(500)</li> <li>전북 : 남원(500), 부안(500), 순창(500)</li> </ul>

구분		실시지역(금액-만원)
		• 전남 : 순천(500), 구례(500), 강진(500), 무안(500), 완도(500), 신안(500)
		• 경북 : 김천(500), 봉화(300), 의성(500), 문경(500)
		• 경남 : 창녕(매입 700, 임차 350), 하동(500), 함양(300), 거창(300)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	• 충남 : 부여(350)
농지 지원	귀농·귀촌 농지임차료 지원	• 전북 : 군산(250), 완주(250), 고창(5,000) • 경북 : 군위(200), 청송(150), 고령(100)
	농지구입세제지원	• 경북 : 청송(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시설원예임차료 지원	• 전남 : 담양(150)
	자녀학자금 보조	• 전북 : 완주(50~200)
		• 전남 : 순천(수업료, 입학금)
		• 경북 : 영주(100), 문경(100), 울릉(수업료, 입학금)
		• 경남 : 하동(입학금, 수업료), 함천(10/분기-50/분기)
		• 제주 : 특별자치도(120/년)
출산 지원	출산장려금	• 전북 : 완주(120, 둘째이상)
	출산도우미 지원	• 제주(187)
정착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 경기 : 포천(1,000)
		• 강원 : 홍천(50), 영월(600)
		• 충북 : 보은(300~500)
		• 전남 : 여수(360), 나주(1,000), 강진(2,000), 해남(2,000), 영암(720~1440), 무안(100), 함평(1,000), 장성(1,000), 진도(450)
	정착장려금	• 경북 : 포항(500), 김천(1,000), 안동(400), 구미(400), 영주(500), 상주(500), 군위(400), 의성(400), 영양(400), 영덕(500), 청도(400), 성주(700), 칠곡(500), 예천(400), 봉화(400)
		• 경남 : 밀양(3,750), 의령(375), 창녕(500), 하동(100), 산청(400), 함양(375~500)
		• 경기 : 연천(500)
		• 충북 : 증평(300)
		• 전남 : 보성(240~600), 완도(300), 신안(300~600)
		• 경북 : 영천(480), 청도(100~200), 봉화(480)

구분		실시지역(금액-만원)
	영농지원금	• 인천 : 용진(200~300)
		• 전북 : 정읍(200), 김제(250), 고창(1인당 100)
		• 경북 : 경주(400), 영천(400), 청송(500), 고령(400), 예천(400), 울진(400), 영양(400)
		• 경남 : 의령(100), 장녕(30), 거창(500), 함천(700)
		• 충북 : 제천(35)
		• 인천 : 용진(1,000)
		• 전남 : 곡성(1,000)
농기계 지원	농기계임대료 지원	• 경기 : 연천(300)
		• 전남 : 영광(임대료의 50%)
		• 경북 : 상주(임대료의 50%)
	귀농가 보행관리기 지원	• 경기 : 포천(150)
	귀농인 소형농기계지원	• 충북 : 제천(210), 청원(250)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충남 : 예산(100)	
	• 충북 : 보은(500), 옥천(100~150)	
농업생산기반시설(소형농기계위주)지원	• 전북 : 부안(250)	
	• 인천 : 용진(500)	
영농자재	영농자재지원사업	• 충남 : 청양(500)
농업시설 지원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 전남 : 진도(200)
	귀농인 비가림하우스(330㎡)지원	• 강원 : 홍천(단동 330㎡ 기준:650만원의 50%)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강원 : 화천(375)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 충북 : 단양(120)
	농업시설 지원	• 전남 : 구례(300)
기타	생활자재구입지원	• 충북 : 보은(20)
	전기, 수도, 인터넷 지원	• 전북 : 완주(960)
	생산기반 지원	• 전남 : 구례(300)
		• 충북 : 단양(200)
		• 전북 : 익산(500)

자료 : 농촌진흥청(2014), 재정리.

□ 교육, 체험지원

- 교육 및 체험관련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설 및 컨설팅 등을 의미함
  - 귀농정책 및 성공사례 등을 안내하고 교육하거나 중앙정부의 귀농교육 사업 지원
  - 또한 현지 견학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예비 귀농인이 생활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등 거처 제공
  - 멘토멘티 네트워크 지원사업 시행, 귀농학교 수료생을 중심으로 멘토와 멘티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시행

<표 26>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체험 지원사업

구분		실시지역(금액-만원)
멘토	귀농인 후견인제(멘토)	• 충북 : 보은(150/3개월)
	귀농·귀촌 멘토 겸 리포터 운영지원	• 경남 : 하동(5/월)
실습	초보귀농인 소규모 실습지원	• 충남 : 금산(756)
체험	체재형 가족농원	• 전북 : 진안(거주지 임대)
	도시민 농촌거주 체험 지원	• 경북 : 울진(100)
귀농인의 집		• 전북 : 장수
		• 경북 : 문경(150)
교육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경북 : 청송(30)
기타	귀농인 농업전문지 무료 구독 지원	• 전남 : 강진

자료 : 농촌진흥청(2014), 재정리.

□ 관계형성 지원

- 집들이비 보조 등을 통해 귀농인의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역주민과 귀농인의 교류를 지원하고 귀농인 모임체 운영을 지원
  - 주민초청행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과의 화합 도모



&lt;표 27&gt; 기초자치단체의 관계형성 지원사업

구분		실시지역(금액-만원)
집들이 지원		• 경기 : 연천(30), 포천(50)
		• 충남 : 홍성(20), 태안(50)
		• 전북 : 무주(50), 순창(50), 고창(50)
		• 전남 : 순천(50), 무안(30), 장성(30), 신안(50)
		• 경북 : 의성(30)
		• 경남 : 창녕(8), 함양(50)
공동체 형성	지역공동체 형성	• 충남 : 청양(50)
	지역공동체 행사 지원	• 전북 : 정읍(50)
	도농 의형제 맥지 운영	• 전남 : 강진
주민 화합	귀농·귀촌인 주민화합 지원	• 경북 : 울진(읍면당 100)
	이웃주민 초청행사	• 전남 : 구례(50)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 경북 : 상주(40)
	소규모전원마을 입주민 초청행사	• 경북 : 상주(100)
	마을주민 초청행사	• 경북 : 문경(50)
	사랑방 운영	• 제주

자료 : 농촌진흥청(2014), 재정리.

#### 정보제공 사업

- 정보제공 지원사업은 주로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정보제공사업은 홈페이지 운영, 지역안내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
  - 중앙정부 박람회 및 홍보설명회 참가 지원

&lt;표 28&gt; 기초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사업

구분		실시지역(금액-만원)
박람회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	• 전북 : 익산

자료 : 농촌진흥청(2014), 재정리.

□ 기타

- 기타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의 소득사업 지원과 행정지원, 기반시설 등 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의미
  - 민원업무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세제지원정책 시행
  - 귀농인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의 소득 지원사업 시행.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시민 초청 행사 등을 추진 하여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임
  - 귀농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사업 시행. 창업을 위한 자금 융자 및 보조, 우수 창업농 육성사업 지원
  - 유통, 판매 및 서비스 등 6차 산업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 창업 비용 지원
  -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 및 활용을 지원

<표 29> 기초자치단체의 기타 지원사업

구분		실시지역(금액-만원)
행정지원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 강원 : 횡성
	경운대행 임작업	• 강원 : 횡성
	상수도요금 50%감면	• 강원 : 횡성
기반시설	마을 기반 조성 지원	• 강원 : 양양
세제지원	농지,주택구입세제지원	• 충북 : 옥천(300)
	세제지원	• 경북 : 영천(200)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 경남 : 창녕, 하동
	주민세 지원	• 경남 : 창녕(교육세 포함 2년간 전액)
	쓰레기 봉투	• 경남 : 창녕
소득 지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충남 : 홍성(500)
	귀농인 소득지원	• 경북 : 문경(400)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 전북 : 임실(2,000)
	소득사업비 지원	• 전북 : 순창(1,000)
	귀농인 소득기반조성사업 지원	• 경남 : 하동(500)
	일자리 창출	• 경북 : 울진(6/일)

구분		실시지역(금액-만원)
창업지원	귀농인 우수 창업농 육성	• 전남 : 순천(1,400)
	귀농인 창업자금	• 전남 : 장흥(1,000), 영광(1,000)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 전남 : 영광(500)
	농업 및 지역농업 연관산업 창업 지원	• 경남 : 의령(500)
	귀농·귀촌 재능활용 창작지원	• 경남 : 의령(300)
	귀농·귀촌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 경남 : 하동(200)
	창업실습비 지원	• 제주(400)
의료	강진의료원 지원	• 전남 : 강진(의료비 50% 할인, 간단한 진료)
	인구증가 시책 지원	• 경북 : 상주(20)
	귀농인 농어촌 진흥 기금 지원	• 경북 : 칠곡(3,000)
	귀농인 아이디어 공모	• 경북 : 울진(1,600)

자료 : 농촌진흥청(2014), 재정리.

### 제3절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 □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

- 최근 삶의 가치 및 인식 변화와 농촌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해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추세
  - 도시지역의 다양한 폐해 및 복잡함을 벗어하기 위해 탈 도시화 및 전원 지향성 증가
- 중앙정부는 2009년 귀농·귀촌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한 귀농·귀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에 정임
  - 정책 초기에는 정착지원금 등의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으

나, 최근 교육 및 체험사업, 관계형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중이며, 대상범위 또한 확대

- 최근 이와 더불어 귀농·귀촌인의 소득지원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6차산업 지원사업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및 시책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농촌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만이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
  - 귀농·귀촌과 관련된 법규, 제도, 행정지침 및 절차 등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범정부적·일관적 지원정책이 필요

□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히, 예비농업인 관련 교육기관과 지원기관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 교육체계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업교육협력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관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고창군을 예를 들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전북대, 고창농협군지부,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오르빌 등이 공동구성한 '고창농업교육협력단'을 중심으로 특산물개발과정(복분자), 산지유통과정(수박브랜드육성), 친환경 농촌관광과정 등 총 4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실습형 현장학습 교육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을 활용하여 인재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가능

- 2009년 농업인재개발원은 2012년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농촌정보문화센터와 통합하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출범하면서 폐지된 바 있음

#### □ 예비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

-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농·창업 관련 지원정책은 귀농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는 귀농 외 도시 은퇴자, 청년취업자 등 다양한 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다양한 도시민의 맞춤형 유입전략이 필요함
- 은퇴 도시민과 구분하여 청년 농업 취업자 등은 유치 전략을 달리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고령 은퇴 귀농·귀촌인의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거나, 지역 내 의료복지 서비스망,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전원생활 지원 시설이 필요
  - 청년 취업자의 경우 맞춤형 창업자금이나 용자제도를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 필요
- 예를 들어, 예비농업인들은 정보통신(IT)기술에 익숙하므로 생산과 마케팅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모바일기술과 결합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 예비농업인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취농·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정보제공 홈페이지나 센터 구축이 미흡한 실정
  - 취농·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연계 및 협력도 필요
- 현행 운영 중인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앙차원의 취

농·창업 종합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세 지역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먼저 구축하여야 함

- 상세 지역별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잠재적 귀농·귀촌 희망자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체계도 함께 마련

#### □ 기존 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 예비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적응 지원도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들이비 보조, 화합행사 개최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중임
  - 그러나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여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따라서 먼저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의 유치는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외의 소득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 유통 등의 창업과 6차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6차산업의 활성화에도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통합 커뮤니티 형성 및 공동 아이디어 발굴 등을 함께 지원해나가야 함

#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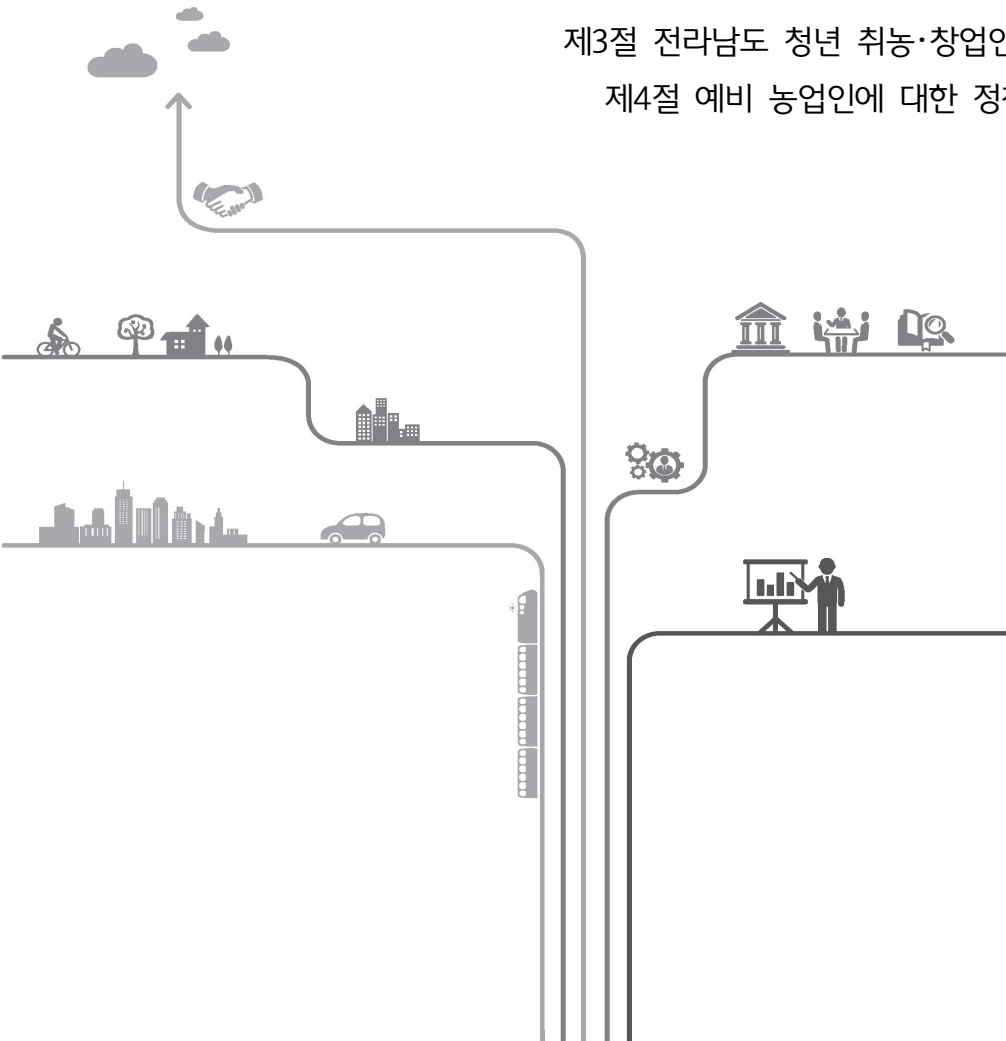
## 전라남도 여건분석

제1절 귀농인구의 특성 및 현황

제2절 전라남도의 농업 현황

제3절 전라남도 청년 취농·창업인구 지원현황

제4절 예비 농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







## 제4장

## 전라남도 여건분석

## 제1절 귀농인구의 특성 및 현황

## 1. 귀농인구의 증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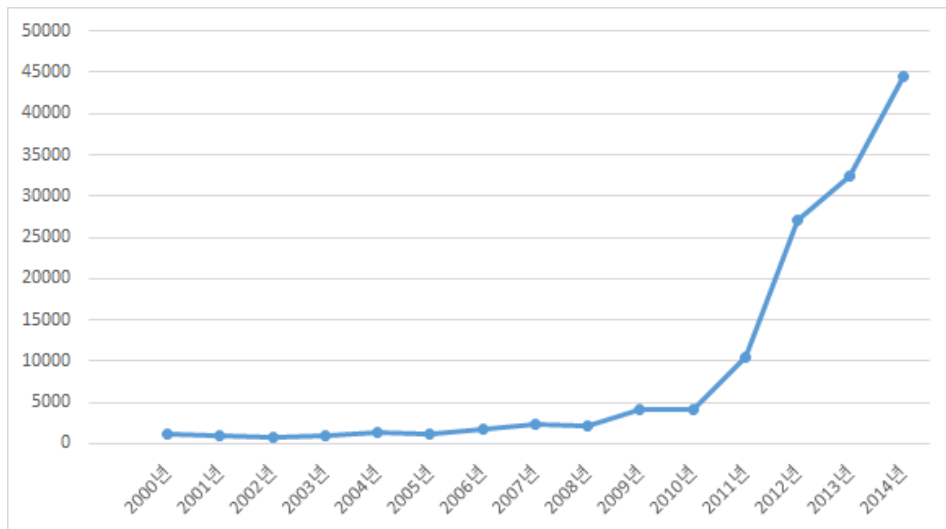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귀농·귀촌 인구이동 증가추세
  - 정부는 1990년부터 귀농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관리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귀농과 귀촌에 대한 통계를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통계청의 귀농인은 1년 전에 도시 지역인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등록명부의 경영주, 축산업등록명부의 종축업자·사육업자·부화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를 뜻함
    - 귀농인통계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결과이므로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실제 귀농인 수와는 다를 수 있음
  - 귀농·귀촌가구는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1년을 기점으로 귀농·귀촌가구의 급격한 증가 양상을 나타냄
    - 2007년부터는 2000가구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2년전인 2007년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4,080가구, 2011년에는 직전해인 2010년보다 158.2% 증가한 10,503가구로 양적인 면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귀농·귀촌가구의 꾸준한 증가와 2010년대에 들어 급격한 증가세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도시민의 전원생활 지향 그리고 정부·지자체의 귀농정책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표 26> 2000년~2014년 귀농·귀촌 가구수 기준 변화

구분	가구수	전년대비 증가율
2000년	1,154	-
2001년	880	-23.7%
2002년	769	-12.6%
2003년	885	15.1%
2004년	1,302	47.1%
2005년	1,240	-4.8%
2006년	1,754	41.5%
2007년	2,384	35.9%
2008년	2,218	-7.0%
2009년	4,080	83.9%
2010년	4,067	-0.3%
2011년	10,503	158.2%
2012년	27,008	157.1%
2013년	32,424	20.1%
2014년	44,586	37.5%

자료: 손상락(2012), 통계청(각년도)

<그림 8> 2000년~2014년 귀농·귀촌 가구수 기준 변화추이



□ 전남이 경남, 강원과 함께 귀농 우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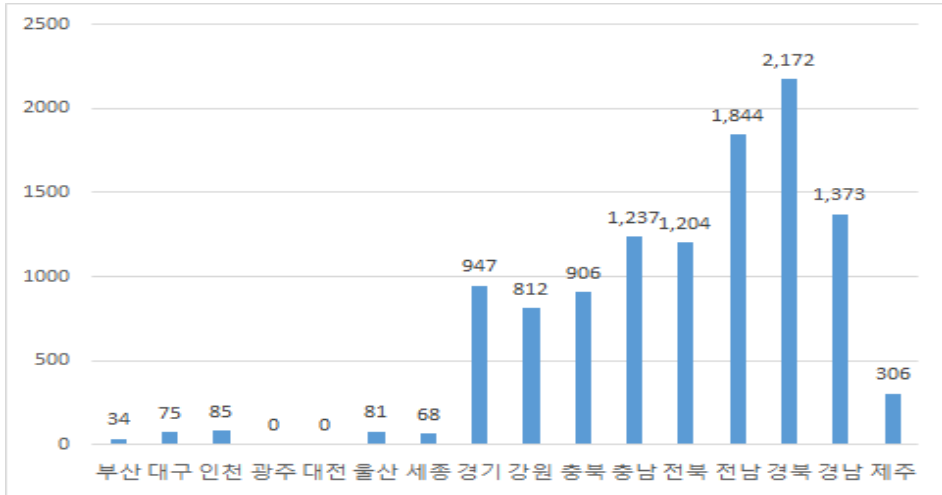
- 2014년 시·도별 귀농가구분포로는 경북이 2,172가구(19.5%)로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1,844가구), 경남(1,373가구), 충남(1,237가구), 전북(1,204가구)이 1,000가구를 넘었음
- 귀농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근지역보다는 농업이 비교적 활발한 경북, 전남, 경남, 충남, 전북 등의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4년 기준 전남지역은 전국 귀농 가구수의 16.5%, 귀농인구의 16.3%를 차지해 귀농에 있어서 선호되는 지역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시·도별 귀농 가구/인구(2014년)

연도	전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구수	11,144	34	75	85	-	-	81	68	947	812	906	1,237	1,204	1,844	2,172	1,373	306
비율	100.0	0.3	0.7	0.8	-	-	0.7	0.6	8.5	7.3	8.1	11.1	10.8	16.5	19.5	12.3	2.7
가구원	18,864	59	138	134	-	-	153	107	1,571	1,306	1,473	2,012	2,143	3,077	3,688	2,445	558
비율	100.0	0.3	0.7	0.7	-	-	0.8	0.6	8.3	6.9	7.8	10.7	11.4	16.3	19.6	13.0	3.0

자료: 통계청(각년도)

<그림 9> 시·도별 귀농 가구수(2014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인구수가 비슷한데도 귀농 가구수는 전라남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4년 전라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871,560명이고 전라남도는 1,905,780명으로 두 지역의 인구규모는 비슷한 규모라 할 수 있음
  - 2014년 농가수를 비교해보면 전라북도 104,036가구, 전라남도 160,142가구로 전라남도의 농가수 규모가 전라북도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라남도 다음으로 귀농가구가 많은 경상남도과 비교해 볼 때에 경상남도 주민등록인구는 3,350,257명으로 전라남도에 비해 인구규모는 매우 크지만 귀농가구 규모는 인구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2014년 농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상남도 135,112가구로 전라남도의 160,142가구에 비해 농가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 귀농 인구는 전남 내에서 고른 분포

- 2014년 전라남도의 시·군별 귀농가구 및 귀농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특정지역에 귀농가구가 편중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의 분포를 나타냄
- 전라남도 내에서 귀농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는 나주시(121가구, 6.6%), 고흥군(128가구, 6.9%), 화순군(119가구, 6.5%), 무안군(113가구, 6.1%), 장성군(113가구, 6.1%) 등이 100가구 이상의 귀농가구를 나타내었음
- 2014년 기준 전라남도의 전체 귀농 전입가구원수는 3,077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특히 신안군에 전라남도 귀농인구의 7.1%인 217명이 귀농하여 전라남도 귀농인구에서 가장 높은 귀농인구 유입을 나타내었음

<표 34> 2014년 전라남도 시·군별 귀농가구 및 귀농인구 분포

구 분	귀농가구주				전입가구원			
	총 수	비중 (%)	가구주 (남)	가구주 (여)	총 수	비중 (%)	가구원수 (남)	가구원수 (여)
전국	11,144	-	7,739	3,405	18,864	-	10,697	8,167
전남	1,844	100.0	1,273	571	3,077	100.0	1,778	1,299
여수시	47	2.5	39	8	108	3.5	59	49
순천시	91	4.9	73	18	197	6.4	114	83
나주시	121	6.6	90	31	189	6.1	119	70
광양시	41	2.2	25	16	62	2.0	32	30
담양군	100	5.4	59	41	169	5.5	87	82
곡성군	89	4.8	67	22	121	3.9	79	42
구례군	71	3.9	51	20	129	4.2	70	59
고흥군	128	6.9	83	45	208	6.8	115	93
보성군	80	4.3	53	27	135	4.4	83	52
화순군	119	6.5	71	48	167	5.4	93	74
장흥군	98	5.3	71	27	144	4.7	84	60
강진군	83	4.5	66	17	161	5.2	92	69
해남군	128	6.9	101	27	198	6.4	126	72
영암군	73	4.0	49	24	126	4.1	77	49

구 분	귀농가구주				전입가구원			
	총 수	비중 (%)	가구주 (남)	가구주 (여)	총 수	비중 (%)	가구원수 (남)	가구원수 (여)
무안군	113	6.1	66	47	180	5.8	96	84
함평군	84	4.6	58	26	124	4.0	76	48
영광군	55	3.0	43	12	100	3.2	58	42
장성군	109	5.9	66	43	197	6.4	107	90
완도군	50	2.7	34	16	79	2.6	45	34
진도군	43	2.3	30	13	66	2.1	40	26
신안군	121	6.6	78	43	217	7.1	126	91

자료: 통계청(각년도)

## 2. 귀농가구의 가구 특성 현황

### 귀농가구주 40~50대에서 높은 비중

- 2014년 기준, 전국 귀농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40~50대가 62.0%를 차지하였음
  - 60대 이상의 귀농가구주 비율이 27.3%로서, 퇴직이후의 경제활동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인구가 귀농인구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젊은층에 해당하는 30대 이하의 귀농가구주 역시 1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의 귀농층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가구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5> 2014년 귀농가구의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전국		전남	
성별	계	11,144	100.0%	1,844	100.0%
	남자	7,739	69.4%	1,273	69.0%
	여자	3,405	30.6%	571	31.0%
30대이하	계	1,197	10.7%	249	13.5%
	남자	930	8.3%	182	9.9%
	여자	267	2.4%	67	3.6%
40대	계	2,501	22.4%	446	24.2%
	남자	1,740	15.6%	329	17.8%
	여자	761	6.8%	117	6.3%
50대	계	4,409	39.6%	674	36.6%
	남자	2,904	26.1%	439	23.8%
	여자	1,505	13.5%	235	12.7%
60대	계	2,383	21.4%	362	19.6%
	남자	1,771	15.9%	264	14.3%
	여자	612	5.5%	98	5.3%
70대이상	계	654	5.9%	113	6.1%
	남자	394	3.5%	59	3.2%
	여자	260	2.3%	54	2.9%

자료: 통계청(각년도)

- 전남지역 귀농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전국기준과 비교할 때 전남지역 전체 귀농가구 중 40대 이하의 비중이 전국기준 비중에 비해 다소 높음
  - 청년 농업인에 해당되는 30~40대의 귀농인구 비율이 전남의 경우 37.7% 인데 비하여 전국은 33.1%를 차지
  - 전남지역 전체 귀농가구 중 30대이하의 비중이 13.5%로 전국 30대이하 귀농가구 비중인 10.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전국 귀농가구 중 40대 귀농가구의 비중은 22.4%로 나타났는데, 전남지역은 40대 귀농가구의 비중이 24.2%로 전국기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전남지역 귀농에 비교적 젊은층의 귀농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귀농가구 규모가 대체로 1~2인 규모 중심

○ 2014년 기준 전국 귀농가구의 전입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1~2인 전입 가구가 82.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전입가구원수는 1.69 명으로 나타남

- 전입가구원수별 귀농가구 비율은 1인 전입가구 59.2%, 2인가구 23.7%, 3인가구 8.5%, 4인 이상 가구 8.7%로 나타남
- 2010년기준 인구총조사의 전국 가구원수 비율에서는 1인가구 23.9%, 2인가구 24.3%, 3인가구 21.3%, 4인가구 22.5%로 나타남
- 일반적인 가구원수 규모와 비교할 때 귀농가구의 경우 가족전체의 이주 보다는 가구주와 배우자 중심의 귀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전라남도 귀농가구의 가구원규모별 분포역시 전국기준의 가구원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 전라남도지역은 1~2인가구가 82.9%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1인가구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나홀로 귀농이 많은 것으로 보임

<표 36> 2014년 전입가구원수별 귀농가구수

구분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전국	수	11,144	6,597	2,640	943	964
	%	100.0	59.2	23.7	8.5	8.7
전남	수	1,844	1,142	387	149	166
	%	100.0	61.9	21.0	8.1	9.0

자료: 통계청(각년도)



### 3. 귀농 전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

□ 귀농전 거주지역 수도권 지역 비중이 36.3%

- 전남지역으로의 귀농가구의 귀농전 거주지역의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주(650가구)와 전남지역내(326가구)의 귀농 비중이 52.9%의 높은 비중 보임
  - 전남지역으로의 귀농은 인근 도시 지역에서의 이동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렇지만 서울(275가구), 경기(296가구), 인천(98가구)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귀농은 전남지역 귀농가구의 3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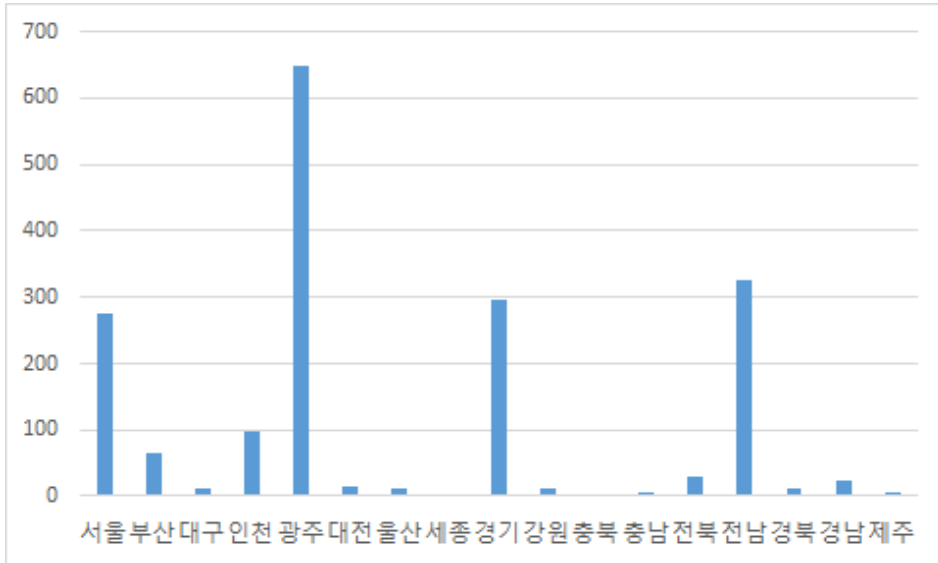
<표 37> 귀농 전 거주지역별 귀농가구 현황

(단위 : 가구)

귀농 전 전입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14년	11,144	2,139	802	890	622	721	471	239	5	2,367	222	255	259	495	357	472	694	134
(비율)	(100.0)	(19.2)	(7.2)	(8.0)	(5.6)	(6.5)	(4.2)	(2.1)	(0.0)	(21.2)	(2.0)	(2.3)	(2.3)	(4.4)	(3.2)	(4.2)	(6.2)	(1.2)
부산	34	4	22	2				1		1							4	
대구	75	3	3	62	1			1		2						1	2	
인천	85	24	1		39					21								
울산	81	5	14	4	1		1	47					2			3	4	
세종	68	12	1	1	3		18	1	1	17		3	7	1			3	
경기	947	401	5	4	48	1	8	4		458	4	4	2	2		3	2	1
강원	812	256	6	9	66	2	5	5		262	166	15	7	3	1	1	7	1
충북	906	201	11	12	66	4	116	4		259	4	184	15	5	1	16	8	
충남	1,237	273	13	8	134	6	214	3	2	346	4	13	194	17		2	5	3
전북	1,204	245	30	14	58	51	59	7		246	4	6	13	432	13	6	17	3
전남	1,844	275	64	12	98	650	16	11	1	296	13	4	5	29	326	12	25	7
경북	2,172	269	193	653	80	2	23	121	1	303	22	19	9	2	3	410	60	2
경남	1,373	103	423	96	18	3	7	32		98	2	2	4	2	12	17	551	3
제주	306	68	16	13	10	2	4	2		58	3	5	1	2	1	1	6	114

자료 : 통계청(각년도)

<그림 10> 전남지역 귀농가구의 귀농전 거주지역 분포



자료: 통계청(각년도)

#### 4. 귀농가구의 농지임차 현황

##### □ 소규모 재배면적이 다수

- 2014년 기준 전국의 총 귀농가구수는 6,097가구이며, 귀농가구의 평균 면적은 0.45ha으로 나타남
- 전국과 유사하게 전남지역 역시 소규모 귀농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재배면적이 0.5ha미만 경우가 전국은 75%, 전남은 74.9%에 이룸
- 다만, 전남지역은 2ha이상의 귀농가구도 전국 보다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0.5~1.0ha미만 면적의 귀농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전남지역 귀농가구 중 3.3%인 29가구는 2.0ha 이상을 경작하는 것에 비하여 전국은 1.9%만이 2.0ha 이상을 경작
  - 0.5~1ha 면적을 경작하는 농가는 전국은 17.0%, 전남은 15.9%를 차지

&lt;표 38&gt; 2014년도 규모별 귀농가구 현황

구분		재배가구수	0.5ha미만	0.5~1.0ha미만	1.0~2.0ha미만	2.0ha이상
전국	개	6,097	4,571	1,038	373	115
	%	100.0	75.0	17.0	6.1	1.9
부산		15	12	2	1	-
대구		31	29	2	-	-
인천		46	40	3	3	-
울산		35	27	7	1	-
세종		25	19	5	1	-
경기		452	341	74	27	10
강원		472	365	70	30	7
충북		562	426	102	25	9
충남		767	571	131	49	16
전북		603	450	101	42	10
전남	개	867	649	138	51	29
	%	100.0	74.9	15.9	5.9	3.3
경북		1,311	947	252	98	14
경남		748	588	113	33	14
제주		163	107	38	12	6

\* 귀농인이 농업경영체등록자료에 등록된 재배작물별 재배면적을 집계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 상대적으로 높은 임차비용

- 전라남도 귀농가구의 경우 전국대비 순수임차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작물 평균 재배면적은 전국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전라남도 지역은 전국 귀농가구 대비 더 넓은 면적을 경작하지만 임차(일부임차포함)를 통한 재배의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귀농가구의 주요 재배작물의 종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됨
  - 전라남도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귀농가구의 논벼재배비율이 높아 임차

및 재배면적이 전국평균 대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귀농가구의 평균 작물재배면적 분포와 농지의 소유·임차 분포를 살펴볼 때에 다수의 귀농가구들이 귀농 초기단계(1년 이내)에서의 농업종사 규모는 소규모에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9> 작물재배농지의 자경·임차별 귀농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m<sup>2</sup>)

구분	작물재배가구		순수자경가구		자경+임차가구				순수임차가구		
	가구수	평균 재배 면적	가구수	평균 자경 면적	가구수	평균 재배면적	자경 면적	임차 면적	가구수	평균 임차 면적	
전국	개	6,097	4,492	3,636	3,737	612	7,422	3,347	4,075	1,849	5,006
	%	100.0	-	59.6	-	10.0	-	-	-	30.3	-
전남	개	867	4,894	438	3,751	117	10,195	3,909	6,286	312	4,512
	%	100.0	-	50.5	-	13.5	-	-	-	36.0	-

\* 귀농인이 농업경영체등록자료에 등록된 임차여부별 작물재배면적을 집계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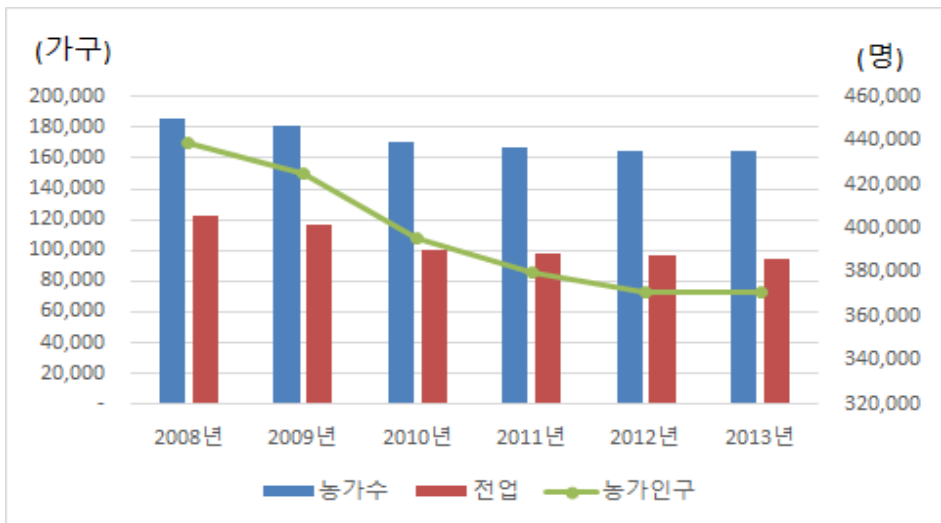
## 제2절 전라남도의 농업 현황

### □ 전라남도 농가 및 농가인구 감소 추세

- 2008년~2013년까지 5년동안 전라남도지역의 농가수, 전업농가수, 농가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임
  - 전라남도의 전체가구수는 2008년 773,087가구에서 2013년 815,769가구로 증가한반면 농가수는 감소추세를 나타냄
  - 2008년 기준 전체가구 대비 농가수의 비율은 24.0%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가구대비 20.2%로 전라남도지역의 농가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농가수와 전업농가의 감소추세에 비해 농가인구의 감소추세가 더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2008년 주민등록기준 전체인구는 1,938,690명이었고, 2013년 주민등록 전체인구는 1,931,716명으로 지역전체의 인구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농가인구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냄
  - 농가인구 감소추세에 비해 가구수의 감소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화를 나타낸 것은 농가의 가구당 가족구성원의 규모가 점차 소규모화되어 가구수 감소세가 낮게 나타난 결과로 파악됨

<그림 11> 2008년 이후 전라남도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추이



자료: 전라남도(2014)

- 2013년 기준 전라남도의 농가수는 164,834가구 중 전업농가는 94,975가구로 전체 농가수의 57.6%의 비율을 나타냄
  - 겸업농의 경우 1종 겸업농은 31,323가구, 2종 겸업농은 38,536가구로 농업과 다른 경제활동을 겸하는 비율 역시 42.4%로 높게 나타남

- 전라남도지역 농가인구는 2008년 438,961명에서 2013년 현재 370,954명으로 감소하였음
  - 2008년기준 전라남도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였으나, 2013년에는 19.2%로 감소하였음
  - 특히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29,319명이 감소하여 농가인구의 감소세가 크게 나타남
- 2013년 기준 전라남도지역의 시·군별 농가수와 농가인구를 살펴보면新安군, 진도군, 고흥군, 곡성군, 함평군이 전체 가구수 및 인구 대비 농가수와 농가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농가수가 1만 가구 이상인 지역으로는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 해남군 등이 있음
  - 농가인구는 순천시가 33,81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나주시(28,615명), 고흥군(27,054명)의 순으로 농가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임

<표 40> 2013년 전라남도 시·군별 농가수 및 농가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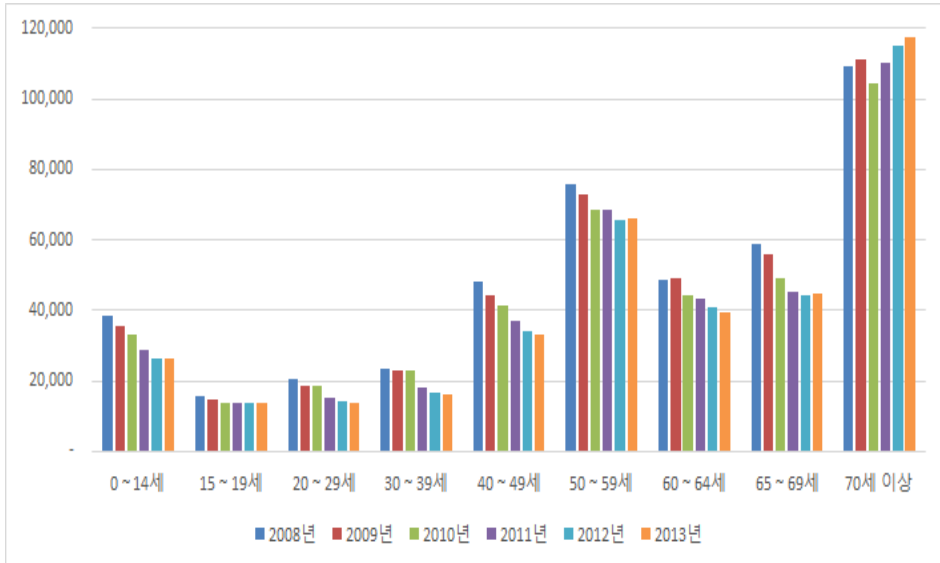
구분	가구수				인구수		
	전체 가구수 (가구)	농가수 (가구)	농가비율 (%)	전업농 가구수 (가구)	전체인구 (명)	농가인구 (명)	농가인구 비율 (%)
전라남도	815,769	164,834	20.2%	94,975	1,931,716	370,954	19.2%
목포시	99,334	1,259	1.3%	438	243,171	3,505	1.4%
여수시	114,364	11,305	9.9%	6,011	294,565	26,706	9.1%
순천시	104,507	12,889	12.3%	5,959	277,345	33,811	12.2%
나주시	41,094	12,311	30.0%	7,044	89,462	28,615	32.0%
광양시	57,707	6,826	11.8%	2,477	152,995	16,271	10.6%
담양군	21,516	6,307	29.3%	4,361	48,222	15,701	32.6%
곡성군	14,705	5,454	37.1%	3,656	31,391	11,598	36.9%
구례군	12,230	3,831	31.3%	2,214	27,315	8,542	31.3%

구분	가구수				인구수		
	전체 가구수 (가구)	농가수 (가구)	농가비율 (%)	전업농 가구수 (가구)	전체인구 (명)	농가인구 (명)	농가인구 비율 (%)
고흥군	34,699	12,909	37.2%	6,515	71,259	27,054	38.0%
보성군	22,296	7,603	34.1%	5,259	46,736	17,050	36.5%
화순군	29,517	6,498	22.0%	4,143	68,642	14,953	21.8%
장흥군	20,447	5,793	28.3%	4,079	43,409	12,438	28.7%
강진군	18,756	5,567	29.7%	4,472	40,429	10,699	26.5%
해남군	35,438	10,935	30.9%	5,754	78,643	23,470	29.8%
영암군	27,191	8,056	29.6%	5,722	62,791	16,604	26.4%
무안군	33,549	8,685	25.9%	3,758	80,768	21,194	26.2%
함평군	17,604	6,157	35.0%	3,860	36,171	14,131	39.1%
영광군	26,309	6,913	26.3%	4,841	58,246	15,029	25.8%
장성군	21,191	5,648	26.7%	3,673	47,430	12,680	26.7%
완도군	25,240	5,278	20.9%	2,383	54,506	11,311	20.8%
진도군	15,803	5,882	37.2%	2,775	33,546	12,392	36.9%
신안군	22,272	8,729	39.2%	5,581	44,674	17,200	38.5%

자료: 전라남도(2014)

- 연령별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기준 70세 이상 농가인구(117,413명)는 전체 농가인구(370,954명)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60대(84,116명) 22.7%, 50대의 비율이 17.9%(66,302명)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청장년층이라 할 수 있는 20~40대 농가인구는 17.0%의 비율을 나타냄
- 2008년~2013년 사이 연령대별 인구수 변화를 살펴보면 70대만이 유일하게 해당 연령대에서의 농가인구가 증가한 반면, 다른 연령대는 모두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2008~2013년 전라남도 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자료: 전라남도(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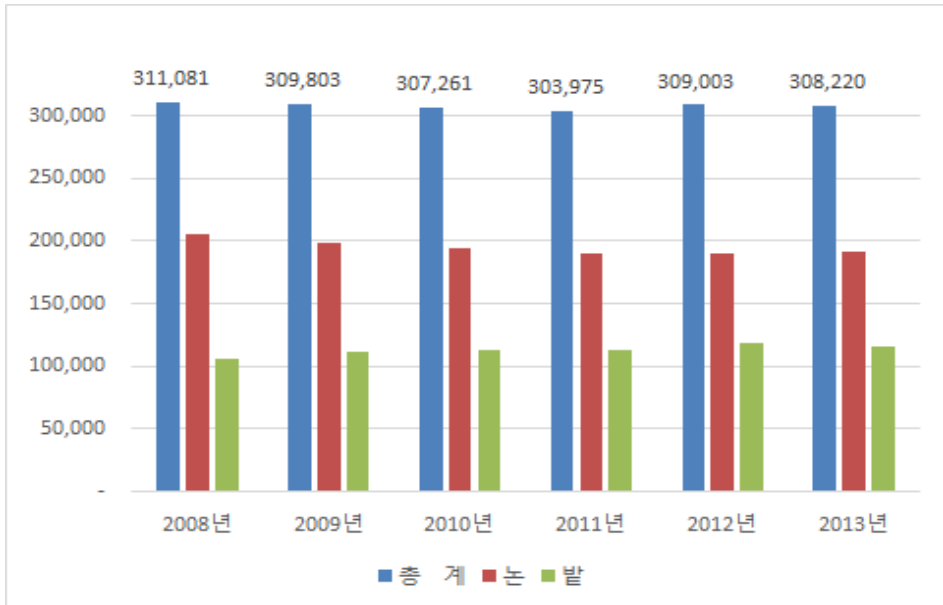
경지면적 논의 높은 면적비중과 밭 경지면적 증가추세

- 전라남도의 경지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311,081ha에서 2013년 308,220ha로 5년 사이 2,861ha의 경지면적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경지면적 중 논밭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경지면적 기준 논이 62.3%, 밭이 37.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논의 경지면적은 5년 사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밭의 경지면적은 다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lt;그림 13&gt; 2013년 전라남도 경지면적 변화

(단위: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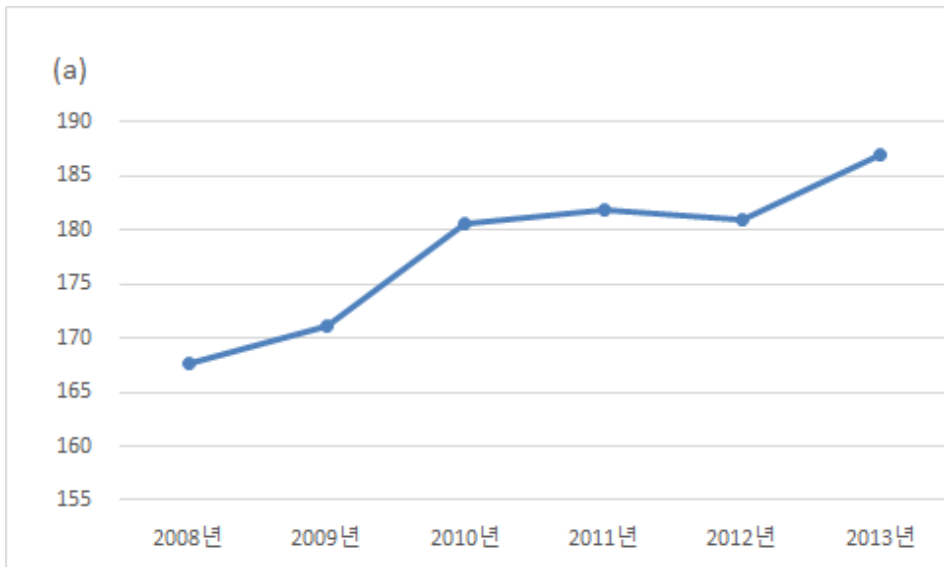


자료: 전라남도(2014)

- 가구당 경지면적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라남도지역 전체 경지면적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에 비해 가구당 경지면적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기준 가구당 경지면적은 168a였으나, 2013년에는 가구당 187a로 개별 가구당 농사를 짓는 면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전라남도지역의 전체경지면적 규모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농가수가 감소한 결과 가구당 경지면적이 증가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2008년과 2013년의 논밭 가구당 경지면적 규모를 비교해보면 논이 가구당 경지면적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밭의 가구당 경지면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논의 가구당 경지면적규모는 2008년 기준 111a에서 2013년 116a 규모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밭의 가구당 경지면적규모는 2008년 기준 57a에서 2013년 71a 규모로 큰 변화를 나타냄

<그림 14> 2008년~2013년 전라남도 가구당 경지면적 변화추이



자료: 전라남도(2014)

- 지역별로는 해남군이 경지면적이 35,369ha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으며, 가구당 경지면적 역시 323ha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강진군과 장흥군은 전체 경지면적 중 논의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3.5%와 81.5%로 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강진군과 장흥군은 가구당 경지면적 역시 논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논농사 위주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 중 밭이 차지하는 비율

이 각각 73.4%, 67.3%, 63.6%로 나타나 밭농사 위주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당지역들은 가구당 경지면적 역시 논에 비해 밭의 면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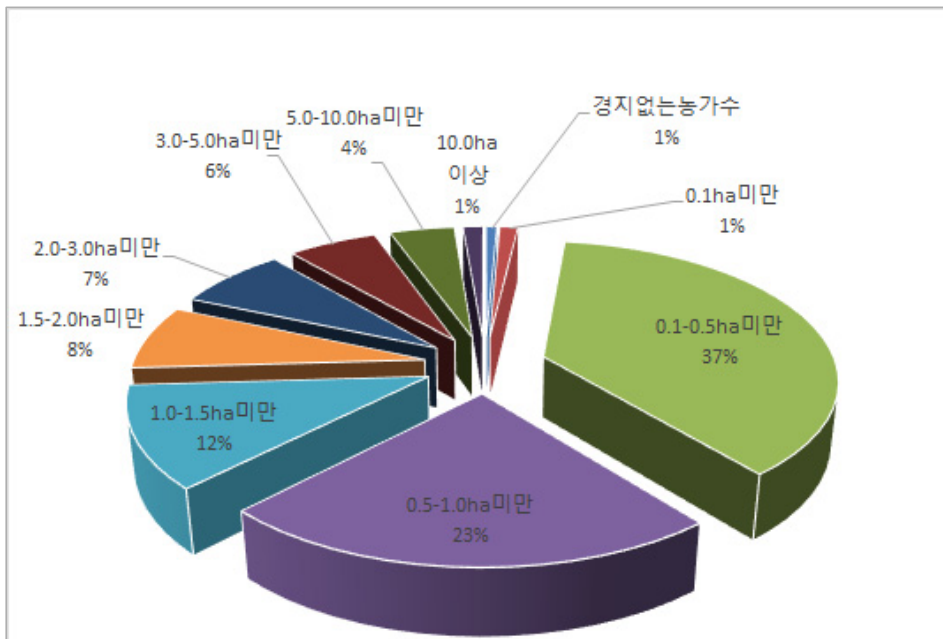
<표 41> 2013년 전라남도 시·군별 경지면적 및 가구당 경지면적

연도	총계 (ha)	경지면적		가구당 경지면적 (a)	가구당 경지면적	
		논	밭		논	밭
전라남도	308,220	191,893	116,327	187	116	71
목포시	854	227	627	68	18	50
여수시	8,299	2,717	5,583	73	24	49
순천시	13,838	6,478	7,360	107	50	57
나주시	22,394	14,838	7,556	182	121	61
광양시	5,426	1,978	3,449	79	29	51
담양군	9,462	7,087	2,375	150	112	38
곡성군	8,527	5,589	2,938	156	102	54
구례군	5,581	3,365	2,216	146	88	58
고흥군	22,732	15,506	7,227	176	120	56
보성군	14,683	9,844	4,839	193	129	64
화순군	10,440	6,296	4,144	161	97	64
장흥군	11,655	9,545	2,110	201	165	36
강진군	13,036	10,889	2,146	234	196	39
해남군	35,369	23,042	12,327	323	211	113
영암군	22,981	16,905	6,076	285	210	75
무안군	20,510	10,248	10,263	236	118	118
함평군	13,430	8,734	4,696	218	142	76
영광군	17,287	11,893	5,394	250	172	78
장성군	11,250	6,255	4,995	199	111	88
완도군	7,295	2,824	4,471	138	54	85
진도군	12,590	6,991	5,599	214	119	95
신안군	20,582	10,644	9,937	236	122	114

자료: 전라남도(2014)

- 2013년 기준 전라남도지역 농가들의 경지규모를 살펴보면 01~05.ha규모를 경작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3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그 다음으로 1~1.5ha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가 23.2%로 나타나 50%이상의 농가들이 0.1~1ha규모를 경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지가 없는 농가는 총 1,150가구이며 전체 농가 중 0.7%의 비중을 나타내었음
  - 10ha이상의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가구는 2,134가구로 전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0ha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의 경우 2008년에는 1,349가구로 당시 농가수의 0.7%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134가구 전체 농가의 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경작 가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2013년 전라남도 경지규모별 농가수



자료: 전라남도(2014)

#### □ 전라남도 주요재배작물 식량작물 중심 특성

- 2013년 기준 전라남도지역의 작물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지역의 식량작물생산량은 2008년 1,080,153M/T, 재배면적 241,535ha였으나, 2013년에는 생산량 921,808M/T, 재배면적 209,990ha로 규모가 감소하였음
  - 그러나 전라남도지역에서는 여전히 생산작물 중 식량작물(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식량작물 중에서도 특히 미곡의 비중이 가장 높고(170,690ha, 822,795M/T), 그 다음으로 맥류, 두류, 잡곡, 서류의 순으로 생산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식량작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실류의 경우 배의 재배면적(87,893ha)과 생산량(87,893M/T)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감(55,793M/T), 포도(5,320M/T), 복숭아(5,076M/T), 사과(4,489M/T)의 순으로 전라남도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채류 중에서는 양파의 생산량이 580,151M/T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배추(418,343M/T), 파(170,569M/T), 무(141,152M/T), 마늘(109,263M/T)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냄
- 특용작물의 경우 참깨가 3,631M/T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 7,120M/T에 비해 생산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땅콩은 2008년 생산규모가 388M/T였으나, 2013년에는 959M/T으로 생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배면적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42> 2013년 전라남도 생산작물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M/T)

식량작물		과채류		특용작물		과실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9,990	921,808	4,826	242,864	9547	6578	18,896	220,777

\* 식량작물: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 채소류: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 특용작물: 참깨, 들깨, 땅콩, 유채  
 \*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자두, 기타  
 자료: 전라남도(2014)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의 생산면적 및 출하량 증가

- 전라남도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재배 규모는 2008년 대비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저농약농산물의 인증 및 생산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나타남
- 저농약농산물을 제외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에 있어서는 농가수, 재배면적, 출하량 모두 2008년 대비 2013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기농산물의 재배농가수는 2008년 대비 2013년에 4배 가까이 증가되었으며, 재배면적은 2.7배, 출하량은 1.8배 증가하였음
  - 무농약농산물 역시 재배농가수가 2008년 대비 2013년에 2.2배 증가하였으며, 재배면적은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저농약농산물의 재배농가수, 재배면적 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농약농산물보다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재배로 친환경농산물 재배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lt;표 43&gt;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단위 : 건, 가구, ha, 톤)

구분		2008년	2013년	증감
친환경농산물 합계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7,335	7,155	-180
	농가수	104,407	58,383	-46,024
	면적	101,255.6	70,162.0	-31,094
	출하량	996,317	307,728	-688,589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347	922	575
	농가수	1,084	4,342	3,258
	면적	2,410.3	6,550.0	4,140
	출하량	11,952	21,611	9,659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2,668	5,728	3,060
	농가수	23,988	51,745	27,757
	면적	23,725.2	61,247.0	37,522
	출하량	239,914	243,621	3,707
저농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4,320	505	-3,815
	농가수	79,335	2,296	-77,039
	면적	75,120.1	2,365.0	-72,755
	출하량	744,451	42,496	-701,955

자료: 전라남도(2014)

- 전라남도지역의 2013년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건수는 총 3,221건이며, 3,857가구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보성군의 친환경 축산물 생산량이 41,000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나주시가 30,169톤으로 높은 생산량을 보임
  - 친환경 축산물 인증건수와 농가수 기준으로는 강진군이 인증건수 481건, 농가수 481가구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하량은 낮은 규모를 나타냄

- 해남군과 영암군의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은 각각 16,023톤과 14,336톤으로 보성군, 나주시와 더불어 전라남도지역 친환경축산물 생산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44> 전라남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건수 및 출하현황

(단위 : 건, 가구, 톤)

구분	친환경축산물인증건수	농가수	출하량
전라남도	3,221	3,857	162,327
목포시	2	2	-
여수시	38	44	4,179
순천시	84	112	2,105
나주시	340	342	30,169
광양시	29	32	470
담양군	34	123	7,712
곡성군	158	176	8,631
구례군	41	48	1,773
고흥군	71	245	790
보성군	192	192	41,000
화순군	84	84	957
장흥군	207	215	2,505
강진군	481	481	2,860
해남군	273	273	16,023
영암군	167	335	14,336
무안군	158	232	9,747
함평군	422	424	6,296
영광군	151	171	8,426
장성군	123	123	2,849
완도군	62	62	74
진도군	9	9	521
신안군	95	132	904

자료: 전라남도(2014)



### 제3절 전라남도 청년 취농·창업인구 지원현황

- 전라남도의 다양한 귀농지원사업
  - 전라남도의 귀농관련 지원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녹색생활도움본부), 전라남도(농업정책과), 시·군 및 귀농단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귀농준비과정에서의 지원은 귀농관련 사전체험 및 정보제공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는 귀농인의 집을 통해 귀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산업 인턴 안내와 주택 및 농지·축사 알선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고소득 작목 추천과 귀농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각 시·군 단위에서는 귀농관련 전담 상담직원을 지정하여 귀농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성공농가 현장실습 지원을 하고 있음
  - 귀농이후의 지원에서는 창업자금 지원, 주택마련지원, 기술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는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귀농인 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작물별 기술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시·군 단위에서는 귀농인 멘토링과 귀농인 모임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학영농실천과 농업경영능력 향상 실용교육 실시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과학영농실천과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품목별 생산비 절감기술과 수요가 많은 고소득 작목의 핵심 기술교육 실시
- 가공·유통, 창업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6차산업화 과정 운영
- 농업기술원에서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농기술 교육과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한 현장중심 실용교육을 실시함
- 2015년 농업기술원의 교육훈련과정은 7분야 65과정으로 총 교육인원 2,585명 규모로 진행 중에 있음
- 귀농·귀촌인의 성공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은 가공·유통, 약용작물, 채소, 과수 등의 영농기술교육 등이 주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5> 전남농업기술원 교육과정

교육명칭	세부과정	규모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 유기농자재 제조, 한우 자가사료 제조기술,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여성농업인창업, 6차산업화 - 유기비, 유기과수, 고품질 버섯, 베리류 재배기술, 농식품 유용 곤충 사육기술, 아열대 과·채류, 시설 토마토, 고품질 고추, 시 설딸기	18과정 800명
정보화교육	- 쇼핑몰 상품 사진 촬영, 이미지편집 활용, 파워포인트 - 블로그 및 SNS 활용 마케팅, 글로벌 셀러, 바이럴 마케팅 활용	8과정 200명
귀농·귀촌교육	- 채소, 약용작물, 아열대과수, 과수 - 정보화, 가공·유통, 도시민버스투어	10과정 300명
농업기계교육	- 여성농업기계, 기계화영농사,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영농컨설 팅,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업기계 트레일러 전기용접, 트랙터·관리기, 굴삭기·스 키드러더, 밭작물 작업기	19과정 1,065명
도시소비자교육	- 도시소비자교육(1~4기)	4과정 120명

자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2015)

#### □ 전라남도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의 취농·창업 관련 교육훈련

-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농업기술 교육훈련 지원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과정과 일반적인 시대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주제는 e-비즈니스, 농업의 6차산업화와 관련한 내용이며,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교육 역시 지역별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광양시와 고흥군에서 진행중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과정”은 온라인상에서 내 농장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습득, 고객관리 능력 배양, 소비환경 트렌드파악을 통한 농장 사업계획서 수립 기술 습득 등을 교육
  - 농업의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여수시와 고흥군에서 관련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광양시, 여수시, 장흥군에서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정착교육 과정이 각각 진행되고 있음
- 각 지역별 특색에 맞추어 특정작물의 재배 또는 가공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광양시의 명품매실 교육과정은 매실 재배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스마트폰 활용 농산물 마케팅, 농산물이용 가공품 개발·상품화 및 가공실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여수시 농업인대학의 유기채소반의 경우 유기농업의 토양관리, 작물 생리학 및 재배기술 등의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 순천시농산물직거래 마케팅 활용에 대한 교육과정과 약용작물 가공 및 체험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참가자는 실습재료비와 현장 체험료 정도만을 부담하고 이외의 경비는 순천시에서 지원되고 있음
- 각 지역농업기술센터의 교육내용은 농업인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작물 선택 그리고 재배작물의 판매향상을 위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교육내용 중 농업인 소양교육에서는 농정방향, 리더십, 홍보·마케팅기법, 농업법률상식 등의 내용을 주로 전달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상향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과 더불어 유기농자재 제조·사용 관련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이 이루어짐
- 생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용 및 컨설팅 교육이 여러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가공, 포장재 디자인 교육 역시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lt;표 46&gt; 2015년 전라남도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취농·창업관련 주요 교육훈련

담당 기관	교육명칭	주요교육내용	비고
광양시 농업기술 센터	e-비즈니스 리더양성과정	- 온라인상에서 농장 홍보·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 습득 - 고객 세분화 관리, 고객 유지 능력 배양 - 미래 소비환경의 트렌드를 파악, 농장 사업계획서 수립 기술 습득 - 온라인관련 법규, 신상품 개발능력, 회계관리 및 경영진단의 기술 습득	정원20명
	제 18기 친환경 경농업대학(명품매실) 교육과정	- 명품매실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 - 스마트폰 활용 농산물 마케팅 기술 -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마케팅 차별화 전략 - 농산물 이용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 전략 - 매실 이용 가공실습(매실주 및 매실식초) - 가공, 유통 등 성공 농가방문 벤치마킹	정원40명
	2015년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 과정	- 귀농 컨설팅 코칭 및 영농설계 요령 - 작물별(과수, 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 귀농 성공 위한 농산물 경영마케팅 차별화 전략 - 농기계 안전 사용교육 및 우리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소개 - 귀농 성공정착 농가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정원40명 광양시 귀농귀촌인 및 예정자 대상
여수시 농업기술 센터	2015년도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	- 귀농·귀촌 길라잡이, 귀농·귀촌 경영설계기초 - 토용 및 양분관리, 과수·특용작물 재배기초, 멘토농장 실습교육 - 6차산업 성공농장 견학	-
	여수시 약용작물마스터대학	- 이론학습 : 약용작물 생산현황 및 산업전망, 약초재배기술 및 활용, 약용식물관리, 가공, 유통기술 등 - 가공실습 : 약용작물 가공 실습 - 현장견학 : 약용작물 가공, 유통시설 견학, 재배단지 견학	교육비무료, 정원45명
	여수시 농업인대학 (유기채소반, 농업6차산업반)	- 유기채소반 : 유기농업의 토양관리, 작물 생리학 및 재배기술 등 - 농업6차산업반 : 1·2·3차 산업을 바탕으로 농업 6차산업의 전반적인 교육	교육비무료, 실습재료 개별준비
순천시 농업기술 센터	순천시 친환경 농업대학 (농산물직거래/약용작물)	- 농산물 직거래: 농정시책, 리더십, 마케팅 교육, 팜파티 등 농산물직거래 현장실습, 현장견학 - 약용작물: 농정시책, 리더십, 건강관리, 약용작물 가공 및 체험, 현장견학	실습재료비, 현장체험료만 자부담

담당 기관	교육명칭	주요교육내용	비고
신안군 농업기술 센터	신안군 슬로 시티농업대학 운영(유기농,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정방향, 리더십, 건강관리, 홍보·마케팅기법, 농업 법률상식</li> <li>-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상향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 병행추진</li> <li>- 유기농자재 제조·사용 및 분야별 현장 실습</li> <li>- 생산물 판로확보 마케팅 활용 및 컨설팅 교육</li> <li>-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가공, 포장재 디자인 교육</li> <li>- 국내·외 친환경농업 시스템, 가공유통시설, 성공사례 등 현장견학</li> </ul>	정원60명
장흥군 농업기술 센터	전통 발효차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차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료자 대상 심화교육</li> <li>- 중점 교육내용 : 차고전과 전통 발효차 원리</li> <li>- 전통차(녹차, 발효차) 품질평가 이론 및 실습</li> <li>- 전통차 단계별 제다 체험 및 실습</li> <li>- 차의 종류별 품질관리와 명품화 전략</li> </ul>	정원40명
	귀농·귀촌 영농 정착 기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반 : 귀농 준비자 및 귀농 1~2년차</li> <li>- 중급반 : 귀농 3~4년차</li> <li>- 심화반 : 귀농 5년차 이상</li> <li>- 기초 영농교육, 기술보급전문가·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농업기술+농업경영의 맞춤형 학습 실시</li> </ul>	정원 각 반별30명
고흥군 농업기술 센터	고흥친환경농업대학 『6차 산업 선도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의 6차산업 정책과 사업, 6차산업화 성공·실패 사례</li> <li>- 친환경(유기)농업의 이해, 토양관리, 친환경재배기술, 친환경 병해충 관리기술, 미생물 활용방법</li> <li>- 고객 고객유치 마케팅전략, 농업회계, 현장학습</li> </ul>	-
	2015년도 e-비즈니스 리더 양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업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새로운 가치 창출</li> <li>- 개인 블로그 개설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농산물의 체계적인 판매, 온라인 관련 법규 이해</li> <li>- 신상품 개발능력 증진, e-비즈니스 경영능력 배양</li> </ul>	-
담양군 농업기술 센터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 농육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 이해를 통한 경영전략 수립</li> <li>- 농산물 가공의 이론과 실제, 제조현장 위생관리</li> <li>- 고객감동 마케팅 전략, 상품화전략 제조가공기술</li> </ul>	한국식품정보원 위탁 교육, 정원 35명

자료: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제4절 예비 농업인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

### 1. 조사개요

- 전라남도의 예비 농업인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 농업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총 440개의 응답을 얻었으며 출신대학과 성비에 있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응답자수중 전남대학교 학생은 53.2%, 순천대학교 학생은 46.8%로 비슷한 응답비율을 나타냄
  - 응답자의 성비 역시 남자 47.7%, 여자 52.3%로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얻었음
-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21~25세가 6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부모님 직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13.6%로 비농업종사자 85.9%에 비해 크게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표 47> 잠재적 취농인 정책수요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결과
전체응답자수	전남대학교 234명(53.2%), 순천대학교 206명(46.8%), 총 440명
성별	남자 210명(47.7%), 여자 230명(52.3%)
연령대	20세 이하 145명(33.0%), 21~25세 282명(64.1%), 26세이상 10명(2.3%), 미응답 3명
부모님직업	농업 60명(13.6%), 비농업 378명(85.9%), 미응답 2명
출신지역	도시지역 279명(63.4%), 농촌지역 159명(36.1%), 미응답 2명
출신지 행정구역	전남 189명(43.0%), 비전남 249명(56.6%), 미응답 2명
농업계 고교 졸업여부	농업계 26명(5.9%), 비농업계 411명(93.4%), 미응답 3명

- 출신지역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응답한 결과 농촌지역 출신 응답자는 159명(36.1%)으로 도시지역 279명(63.4%)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출신지에 대한 응답에서 전남지역 출신 응답자는 189명(43.0%), 비전남 지역 출신 응답자는 249명(56.6%)으로 나타남
  - 비전남지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135명(30.8%), 전라북도가 37명(8.4%)로 나타남
  - 요컨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고향인 응답자가 361명으로 설문응답자 440명의 82.04%에 해당
- 농업계고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440명 중 26명(5.9%)만이 농업계 고교를 졸업한 것으로 응답하여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냄

## 2. 향후 진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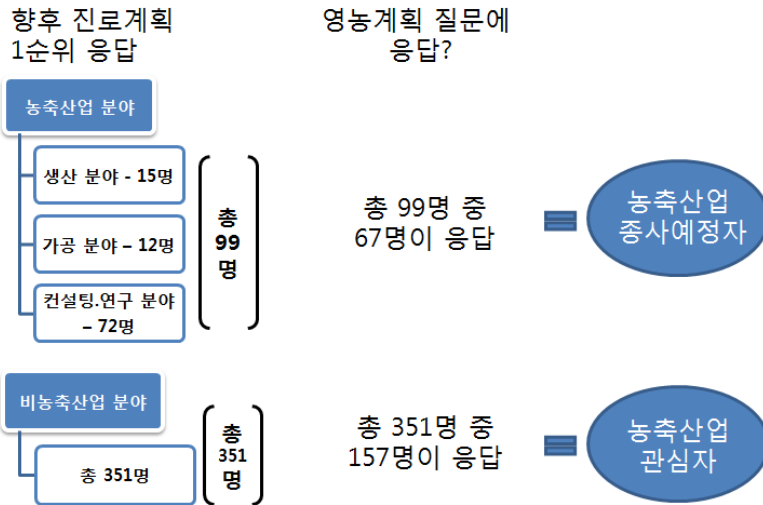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설문집단에 대한 그룹화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설문문항들에 대한 그룹별 분석을 수행할 때, ‘농축산업 종사예정자’와 ‘농축산업 관심자’로 구분하여 분석
- 상기 2개 집단으로 그룹화한 것은 설문문항의 2가지를 결합시킨 것임(<그림 16> 참조)
  - ‘향후 진로계획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과 ‘영농에 관심이 있다면 어떠한 영농계획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 2개를 결합
  - 예를 들어, 진로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농축산업분야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99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67명이 영농계획에 대하여 응답하였으며, 이 67명을 ‘농축산업 종사자’로 명칭함
  - 그리고 진로계획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선적으로 비농축산업분야로 응답하였으나 영농계획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사람이 157명으로, 이 157명



을 ‘농축산업 관심자’로 분류하여, 잠재적인 농축산업 분야 취업자로 간주

<그림 16> 설문 분석에서 이용한 2개 집단



#### □ 농축산업분야 진로계획

- 응답자의 향후 진로계획에 대한 질문결과 농축산업분야 종사 희망자는 22.5%(99명), 비농축산업분야 종사 희망자는 77.5%(341명)으로 농축산업분야 종사 희망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응답자 총 440명 중 55.7%인 245명이 ‘공무원·공공기관’으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음
  - ‘공무원·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농축산업 연구분야’로의 취업희망자가 15.5%(68명)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농축산분야 연구를 제외한 취농·창업 직접 관련 분야로의 진로희망자는 7.0%(31명)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표 48> 향후 진로계획 응답

(N=440)

구분	농축산업분야				비농축산업분야			
	농축산업	농축산물 가공산업	농축산업 건설팅산업	농축산업 연구분야	제조업	서비스업	공무원, 공공기관	기타
응답	15명	12명	4명	68명	16명	27명	245명	53명
비율	3.4%	2.7%	0.9%	15.5%	3.6%	6.1%	55.7%	12.0%
소계	99명(22.5%)				341명(77.5%)			

- 농축산업 분야 취농·창업 희망자 31명의 농축산업 분야 진입 방법에 대한 계획을 질문한 결과 취농·창업시 초기투자비용이 낮은 방법에 대한 응답결과들이 높은 비중을 보임
  - 영농조합법인등에 취업(35.5%), 부모님 영농승계(25.8%), 토지임대후 창업(16.1%), 토지구매후 창업(12.9%)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설문응답결과 취농·창업시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취업과 부모님 영농승계가 61.3%로 나타났으며, 초기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투지구매 및 토지 임대후 창업 희망자는 29.0%로 나타남

<표 49> 영농계획: 농축산 종사 유형

(N=31)

구분	부모님 영농승계	토지구매 후 창업	토지임대 후 창업	다른 농가에 취업	영농조합법인 등에 취업	기타
응답	8명	4명	5명	2명	11명	1명
비율	25.8%	12.9%	16.1%	6.5%	35.5%	3.2%

## □ 향후 영농계획 의사

- 향후 진로계획에 대한 설문 문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취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 향후 영농계획에 대해 별도로 질문하였음
  - 농축산업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 취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응답하였음
  - 향후 영농계획 항목에서는 ‘재배/사육 영농품목’, ‘주력 영농품목’, ‘수입 창출형태’, ‘희망하는 취농·창업지역’ 등에 대해 질문하였음
- 취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224명이었으며, 농축산업 분야 진로를 계획중인 사람 67명과 농축산업분야 진로를 희망하지는 않지만 취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157명이 응답하였음
  - ‘농축산업’, ‘농축산물 가공산업’, ‘농축산업 컨설팅산업’, ‘농축산업 연구분야’로의 진로계획응답자(이하 농축산업 종사예정자)는 총99명이었으나 이중 67명만이 ‘향후 영농계획’에 대해 답변을 하였음
  - 실제 진로희망에서는 농축산업분야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취농·창업에 관심이 있어 향후 영농계획을 응답한 경우(이하 농축산업 관심자)는 157명이었음
  - 농축산분야 종사와 관련한 여러 여건이 취농·창업 희망의사와 실제 진로희망의사에서의 응답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재배/사육 희망 영농품목을 중복하여 선택하게 한 결과 특용작물과 과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지역의 주력 재배작물인 쌀의 경우 다른 작물에 비해 낮은 선택비중을 보여, 청년층의 취농·창업시 작물 재배 성향이 기존 농업인과 다름
  - 화훼를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식물관련 학과, 조경학, 원예학과 등으로 나타나 대학에서의 전공이 재배/사육 영농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축산을 선택한 응답자 역시 농축산업 종사예정자와 농축산업 관심자를

합한 전체 37명중 동물자원학(동물자원학과) 전공자가 25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대학 전공과 재배/사육 영농품목 선택에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0> 영농계획: 재배/사육 영농품목

(N=224)

구분		쌀	특용작물	과수	화훼	채소	축산
농축산업 중사예정자* (N=67)	재배/사육	14	34	22	16	18	19
	영농품목***	11.4%	27.6%	17.9%	13.0%	14.6%	15.4%
	주력	5	24	9	8	6	15
	영농품목	7.5%	35.8%	13.4%	11.9%	9.0%	22.4%
농축산업 관심자** (N=157)	재배/사육	28	92	75	57	58	18
	영농품목***	8.5%	28.0%	22.9%	17.4%	17.7%	5.5%
	주력	10	67	33	21	13	13
	영농품목	6.4%	42.7%	21.0%	13.4%	8.3%	8.3%

\* 농축산업중사예정자: 진로계획 질문에 대해 ‘농축산업’, ‘농축산물 가공산업’, ‘농축산업 컨설팅산업’, ‘농축산업 연구분야’를 선택한 경우

\*\* 농축산업 관심자: 진로계획 질문에서 농축산업분야로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취농창업에 관심이 있고 향후 영농계획에 대해 응답을 한 경우

\*\*\* 재배/사육 영농품목은 중복선택 하였음

- 취농·창업을 하는 경우 수입창출 방법 조사 결과 농축산업에만 중시하겠다는 응답자보다는 다른 부가적인 방법을 병행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농축산업 중사예정자 그룹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사한 비중을 나타냄
  - 농축산업 관심자 그룹에서는 ‘체험관광’이 포함된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lt;표 51&gt; 영농계획: 응답자의 수입창출 형태

(N=224)

구분	농축산업만	농축산업+농축산물 가공소득	농축산업+체험관광	농축산업+농축산물 가공소득+체험관광
농축산업 종사예정자 (N=67)	17	17	15	18
	25.4%	25.4%	22.4%	26.9%
농축산업 관심자 (N=157)	17	37	52	51
	10.8%	23.6%	33.1%	32.5%

희망 취농·창업지역 선택기준

- 취농·창업을 할 경우 지역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224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부모님이 사시는 곳(고향 포함)’이 54.9%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남
  - 전혀 새로운 곳에서 취농·창업을 희망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2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라남도지역에서 취농·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모두 109명이었는데, 이 중 ‘부모님이 사시는 곳(고향포함)’을 취농·창업 지역의 선택기준으로 응답한 비율이 64.2%로 매우 높게 나타남

&lt;표 52&gt; 영농계획: 취농·창업 지역의 선택기준

구분	응답자수	부모님이 사시는 곳(고향 포함)	아는 사람이 있는 곳	전혀 새로운 곳
총 응답자	224	123	44	57
	100.0%	54.9%	19.6%	25.4%
전남지역 선택 응답자	109	70	21	18
	100.0%	64.2%	19.3%	16.5%

- 취농·창업 희망지역의 응답결과에서는 전라남도를 선택한 경우가 절반정도를 차지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 위의 취농·창업 지역선택 기준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이면서, 본인이 학업을 수행하고 있어 익숙한 전라남도 지역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라남도 지역에서 취농·창업을 희망한 응답자들의 희망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른 지역선택을 나타냄
  - 농축산업 종사예정자들은 ‘나주시’와 ‘순천시’를 선택한 응답자가 다소 높았으나 대체로 고른 선택을 나타내었음
  - 농축산업 관심자들 중 전라남도지역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담양군’과 ‘순천시’를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고른 지역선택을 보였음

<표 53> 영농계획: 희망 취농·창업지역

구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제주도	기타지역	미응답
농축산업 종사예정자 (N=67)	32	3	8	3	19	2
	47.8%	4.5%	11.9%	4.5%	28.4%	3.0%
농축산업 관심자 (N=157)	77	11	19	10	40	0
	49.0%	7.0%	12.1%	6.4%	25.5%	0.0%

- 취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희망 취농·창업지역의 선택요인을 1순위, 2순위, 3순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음
  - 1순위의 지역선택 요인에서는 ‘농지 구매/임대 용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판로개척 등 시장 진출 용이’도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초기투자비용과 지속적인 수입의 확보 등 시장·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2순위 지역선택요인으로는 ‘부모님, 지인의 존재’가 가장 높은 지역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하여 지역 친화도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3순위 지역선택요인으로는 ‘운영 자금 지원 획득 용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밖에 ‘재배기술 등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 ‘트렌드, 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농가경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관련한 세부적인 측면의 지원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농축산업분야 향후 영농계획 응답자 중 전라남도지역 취농·창업 의사를 밝힌 109명에 대한 지역선택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타지역 선택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 전라남도지역을 선택한 응답자의 1순위 지역선택요인을 살펴보면, ‘농지 구매/임대용이’ 다음으로 ‘부모님, 지인의 존재’가 높은 선택비중을 나타냄
  - 전라남도지역에 부모님 또는 지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전라남도지역에서 취농·창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4> 영농계획: 희망 취농·창업지역의 선택요인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응답자수	225	100.0%	224	100.0%	218	100.0%
고향	24	10.7%	17	7.6%	5	2.3%
부모님, 지인의 존재	33	14.7%	35	15.6%	0	0.0%
농지 구매/임대 용이	44	19.6%	24	10.7%	31	14.2%
시설 및 기계에 대한 획득 용이	12	5.3%	29	12.9%	22	10.1%
운영 자금 지원 획득 용이	28	12.4%	28	12.5%	36	16.5%
재배기술 등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	20	8.9%	28	12.5%	33	15.1%
등급화, 선별 등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	2	0.9%	2	0.9%	14	6.4%
판로개척 등 시장 진출 용이	40	17.8%	33	14.7%	32	14.7%
트렌드, 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	20	8.9%	25	11.2%	33	15.1%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합류 용이	2	0.9%	3	1.3%	12	5.5%

<표 55> 영농계획: 전라남도를 취업·창업지로 선택한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응답자수	109	100.0%	109	100.0%	109	100.0%
고향	12	11.0%	6	5.5%	2	1.8%
부모님, 지인의 존재	19	17.4%	21	19.3%	5	4.6%
농지 구매/임대 용이	26	23.9%	9	8.3%	17	15.6%
시설 및 기계에 대한 획득 용이	8	7.3%	13	11.9%	9	8.3%
운영 자금 지원 획득 용이	12	11.0%	11	10.1%	18	16.5%
재배기술 등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	7	6.4%	15	13.8%	20	18.3%
등급화, 선별 등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	2	1.8%	0	0.0%	4	3.7%
판로개척 등 시장 진출 용이	14	12.8%	17	15.6%	19	17.4%
트렌드, 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	9	8.3%	16	14.7%	8	7.3%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합류 용이	0	0.0%	1	0.9%	7	6.4%

### 3.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

- 대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다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총 응답자의 13.4%인 59명이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참여 교육과정 중 ‘미래전문경영인 교육과정’ 참여경험 응답자는 43(교육 참여자의 72.9%)명으로 농업관련 정규교육과정 이외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냄
  - 이외에 참여교육과정으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및 휴양림 현장실습, 농촌진흥청 현장실습, 사료배합, 농업경영컨설팅, 영농인턴십, 농가현장 체험실습 등의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인재양성교육 참여 경험자의 참여교육과정 수는 평균 1.3개로 나타남
- 인재양성교육 참여기간 질문에 대한 응답자는 모두 24명이었으며, 교육프로그램 평균 참여일수는 25.5일이었음
  - 인재양성교육에서 현장교육비율이 73.6%로 실내교육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응답하여 현장교육 중심의 실무교육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음



&lt;표 56&gt; 농축산업분야 인재양성교육 참여기간

(N=24)

교육프로그램 평균 참여일수	현장교육비율	실내교육비율
25.5일	73.6%	26.4%

-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 참여 경험자는 총 43명을 대상으로 세부 참여과정 모두를 응답하게 한 결과 친환경농업과정 참여경험자가 24명(5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친환경농업 다음으로는 벤처원에 32.6%(14명), 특용임산과 명품축산이 각 18.6%(8명)으로 응답하였음
  - 친환경농업과정 이수경험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원예학과(4명,16.6%), 식물위학과 및 응용식물학과(3명,12.5%)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다양한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친환경농업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 벤처원에 교육과정 이수자 경험자14명 중 원예생명공학과/원예학과 전공자수는 4명이었으며, 그밖에 다양한 전공과정에서 벤처원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lt;표 57&gt;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 참여자

(N=43)

참여경험자	친환경농업	벤처원에	특용임산	명품축산
43명	24명	14명	8명	8명
100.0%	55.8%	32.6%	18.6%	18.6%

\* 미래전문농업경영인과정의 세부 참여과정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임

-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응답을 얻었음
- 참여동기 관련 요인에서는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였다’라는 응답이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음

-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결과 평균 3.21로 자발적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교육이 향후 농업분야 종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응답의 평균이 3.26으로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 정도가 다소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음
- 교육여건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시설이 우수하였던 것으로 평가한 반면, 교육내용과 참여자의 목표 일치정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점수를 보임
- 교육만족도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평가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영농/축산 관련 전문기술을 획득’ 항목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나타내었음
  - ‘귀농귀촌에 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하였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 의 평균값 2.98(분산 0.674)로 귀농귀촌 관련 정보 부족이 해당 과정에서 아쉬운 점으로 분석되었음

<표 58>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농가 경영 관련 요인		평균	분산
참여 동기	미래 진로계획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3.21	0.724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였다.	3.42	0.662
	강사, 현장학습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맥을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3.00	0.651
	교육을 위하여 예습,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3.23	0.458
	교육이 향후 농업분야 종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3.26	0.842
교육 여건	강사의 전문성이 높다.	3.16	0.694
	교육시설이 우수하다.	3.05	0.649
	현장학습 등 교육방법이 우수하다.	3.00	0.605
	교육일정과 시간이 적절하다.	3.05	0.882
	전체 교육과정이 우수하다.	2.95	0.742
	교육내용이 나의 목표와 일치하였다.	2.77	0.876
	교육내용이 흥미롭게 전달되었다.	2.93	0.809

농가 경영 관련 요인		평균	분산
	교육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다.	3.09	0.643
교육 만족 도	영농/축산 관련 전문기술을 획득하였다(재배기술 등).	2.84	0.787
	영농/축산 분야의 최신 정보를 획득하였다(시장 등).	2.98	0.767
	귀농귀촌에 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하였다.	2.98	0.674
	관련 분야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다.	3.09	0.643
	교육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3.05	0.649

- 향후 대학교 정규 수업 이외에 새롭게 추가 및 강화되었으면 하는 교육과정  
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을 받은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경영관리교육’의 수요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역시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두 번째로 높은 선택비율을 나타냄
  - 3순위로 추가·강화가 필요한 교육과정 수요로는 ‘농산물 마케팅’의 선택비율이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의 응답결과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고른 선택비율을 나타냄
- 수요조사 결과 취농·창업에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영농경영계획수립’이나 ‘작물재배/축산기술에 대한 교육’에 비해 ‘경영관리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현 전공분야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59> 대학교 정규수업이외 추가·강화 필요 교육과정 수요

참여경험자	1순위		2순위		3순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응답자수	427	100.0%	418	100.0%	417	100.0%
토지 구매 등 창업관련 교육	54	12.6%	51	12.2%	57	13.7%
영농경영계획 수립교육	45	10.5%	55	13.2%	43	10.3%
경영관리교육	101	23.7%	86	20.6%	71	17.0%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93	21.8%	80	19.1%	58	13.9%
지역사회 적응 교육	18	4.2%	28	6.7%	51	12.2%
작물재배/축산기술에 대한 교육	74	17.3%	52	12.4%	57	13.7%
농산물 마케팅	40	9.4%	62	14.8%	76	18.2%
기타	2	0.5%	4	1.0%	4	1.0%

#### 4. 농가경영 관련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 농가경영을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장애요인 예상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모든 항목에서 비슷한 평균값을 나타내었음
- 다른 장애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항목은 ‘운영자금 (종자, 묘종, 비료 등 투입재료 구입) 항목이었음
  - 설문응답자들이 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운영자금 마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다른 장애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로 응답한 항목은 ‘재배 및 축산기술’로 나타남
  - 대학에서 배운 재배 및 축산기술이 기반이 되어 향후 농가경영시 도움이 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장애요인의 장애수준 응답결과와 분산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격, 제품 트렌드 등 새로운 시장정보 획득’에 대한 응답에서는 분산이 크게 나타남
  - 새로운 시장정보 획득에 대한 장애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응답자들 간에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lt;표 60&gt; 농가 경영관련 장애요인의 장애수준

농가 경영 관련 요인		평균	분산
자본 요인	농지	3.46	0.855
	시설 및 기계	3.53	0.893
	운영자금(종자, 묘종, 비료 등 투입재료 구입)	3.67	0.941
전문성 요인	재배 및 축산기술	3.39	0.803
	선별, 가공, 등급화 등의 경영능력	3.38	0.861
시장 요인	시장 판로 개척	3.60	0.949
	가격, 제품 트렌드 등 새로운 시장정보 획득	3.49	1.010
인맥 요인	농지, 자금확보 등과 관련된 인적네트워크	3.46	0.837
	재배기술 등 전문성과 관련된 인적네트워크	3.44	0.769
	시장판로, 정보획득과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	3.45	0.873

## 5. 농촌·농가경영에 대한 인식

- 농업인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연간 예상소득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응답자 전체 평균 4,192만원으로 응답함
  - 미응답자를 제외한 425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예상소득 최소값은 500만원, 최대값 5억원의 응답을 얻음
  - 가장 많은 응답결과를 얻은 예상소득수준은 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농업인가구 연평균 소득 3,49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소득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lt;표 61&gt; 취농·창업시 예상소득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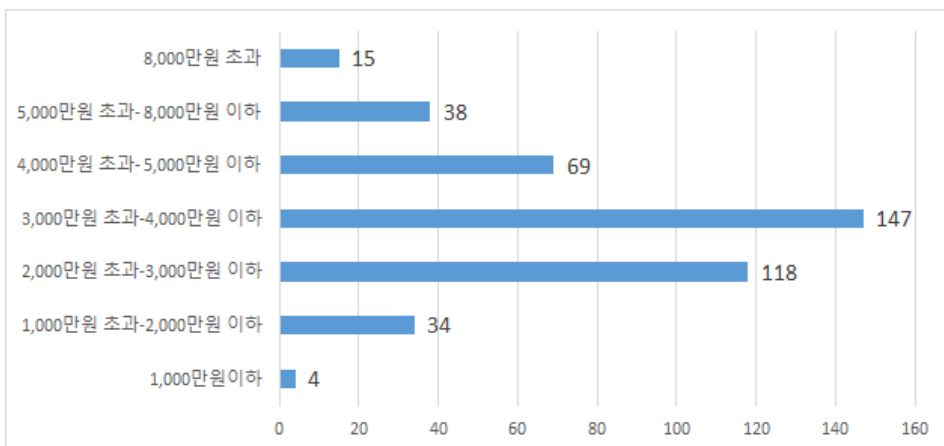
(N=425,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최빈값	최대값	최소값
4,192.0	3,318.2	3,600	3,000	50,000	500

- 응답결과를 구간별로 나누어보면 300만원초과~4000만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는 응답자가 147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냄
  - 연간예상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응답한 경우가 38명(응답자의 6.6%)로 상당 비중을 차지함
  - 반면,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의 예상소득을 응답한 응답자가 53명(응답자의 12.5%)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5천만원 초과 고소득을 예상하는 응답자들은 순천대32명, 전남대 21명이었으며, 학과별로는 순천대 원예학과(8명), 식물외학과(5명), 한약자원개발학과(4명)에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천만원 초과 고소득 응답자 53명 가운데 27명은 전라남도 출신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순천시(6명), 광양시와 구례군(각 3명)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 예상 응답자들의 영농계획 주력품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본 결과 특용작물이 가장 높은 비중(고소득 예상자 중 영농계획 응답자 30명의 36.7%)을 나타냄

<그림 17> 취농·창업시 예상소득별 응답자 분포

(N=425, 단위: 명)



- 향후 농축산업 종사 여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378명의 응답 중 열악한 생활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그 외에 경제적 이유(20.6%)와 열악한 문화환경(14.8%)가 농축산업 종사를 어렵게 하는 농촌지역의 문제점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lt;표 62&gt; 농촌 환경의 여건에 대한 인식

응답자 전체	경제적 이유	열악한 생활환경	열악한 교육환경	열악한 문화환경	생소한 지역	기타
378명	78	109	26	56	38	71
100.0%	20.6%	28.8%	6.9%	14.8%	10.1%	18.8%

## 6.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

- 농업인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취농·창업 이후 농가소득이 발생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의 예상치를 질문한 결과 4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가소득 발생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역시 36.8%로 상당 비중을 나타냄
  - 6년 이상과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자 역시 70명(16.0%)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lt;표 63&gt; 취농·창업 이후 농가소득 발생 예상기간

응답자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10년 이상
438명	20	161	187	63	7
100.0%	4.6%	36.8%	42.7%	14.4%	1.6%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시작하는 취농·창업 희망자들에게 농지와 시설물을 임대해주는 (가칭)창업농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197명(45.1%)이었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240명(54.9%), 미응답자 1명으로 나타남
- 창업농업사업이 추진된다면, 농지 임대기간의 적정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377명이 응답하였으며, 3년 초과 4년 이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표 64> 취농·창업 이후 농가소득 발생 예상기간

응답자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377명	5	44	141	108	79
100.0%	1.3%	11.7%	37.4%	28.6%	21.0%

## 7. 수요조사 결과 종합

- 농축산업 분야 경영관리, 정보획득, 부가가치 창출 중심 교육 필요
- 설문응답의 전체적인 결과에서 재배 및 축산기술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시장 판로개척 및 시장정보획득, 운영자금 마련방법 등 경영기법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농가경영시 장애요인에서 재배 및 축산기술과 선별, 가공 등급화 등의 직접적인 재배/축산기술에 대한 체감 장애도에 비해 자본요인과 시장요인 부문에서 더 높은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대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추가·강화되었으면 하는 교육과정에서도 1순위와 2순위 선택에서 공통적으로 ‘경영관리교육’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많은 선택을 받았음
  -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작물재배/축산기술 등에 대한 교육’에 비해 경영관리기법, 정보획득 방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



대한 잠재요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작물재배/축산기술’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역시 요구됨
  - 작물재배 및 축산기술 등에 대해서는 식물·원예·조경학·동물자원학 등 농축산업 직접 관련 전공자들은 농축산업 기술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직접적인 농축산업 분야 생산·재배와 다소 거리가 있는 전공자들의 경우 여전히 작물재배/축산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추가·강화되었으면 하는 교육과정에서 ‘작물재배/축산기술에 대한 교육’은 ‘경영관리교육’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요를 나타내었음
- 농축산업 종사예정자에 비해 농축산업 관심자들이 향후 영농계획 중 수입창출방법에 있어 ‘체험관광’과의 결합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농축산업 종사예정자의 경우 수입창출 형태에 대해 농축산업 소득, 농축산물 가공소득, 체험관광 등 모든 결합 방법에 대해 고른 응답을 보임
  - 반면 농축산업 관심자들은 ‘농축산업+체험관광(33.1%)’, ‘농축산업+가공소득+체험관광(32.5%)’으로 체험관광과의 결합에 대해 더욱 적극적임
  - 농축산업 관심자들에게는 특히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부가가치 창출 방법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재배/사육 영농품목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들의 영농품목 선택에서 전남지역 주력품목인 미곡(쌀)보다는 ‘특용작물, 과수, 채소’등의 선택비중이 높아 단순 생산보다는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쌀(미곡)은 전통적인 전라남도지역 주력재배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배/사육 영농품목에서 쌀에 대한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남
  - 반면, 특용작물, 과수, 채소 등의 선택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작물은 1차적인 생산·판매에 더하여 가공 후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목임
  - 응답자들의 학력수준이 대학 이상인 만큼 단순 생산·판매에서 더 나아

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욕구가 많으며, 가공·판매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작물재배/축산기술에 더하여 농축산물의 재배/가공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취농·창업의 진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

- 농축산업 종사예정자의 대학교 졸업이후 진로계획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 취업’등의 취업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농조합법인 취업 다음으로 농축산업분야 종사 유형으로 ‘부모님 영농승계’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음
- 농가경영시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도 농지, 시설 및 기계, 운영자금 등 자본요인에 대한 장애수준이 모두 3.5점 이상으로 나타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취농·창업지역 선택요인 응답결과 1순위 선택요인에서 ‘농지 구매/임대 용이’가 가장 중요한 지역선택요인으로 응답하였음
  - 이와 더불어 희망 취농창업지역 선택에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지역선택의 이유로 많이 선택하는 이유 또한 부모님이 소유한 농지와 시설 및 기계를 기반으로 취농·창업을 생각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취농·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젊은 예비 취농·창업자들의 자본 부족과 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취농·창업 초기 단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농조합법인 취업을 통한 취농 기회를 확대하고, 농지임대 비용 보조(저리융자 등), 취농·창업 자본금 지원, 시설 및 기계의 공동사용(공공임대)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 특정 영농품목의 집단 취농·창업 기회 제공

- 향후 영농계획에서 재배/사육 영농품목 중 ‘화훼와 축산’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관련학과 전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화훼를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식물관련 학과, 조경학, 원예학과 등이었으며, 축산 선택 응답자 역시 동물자원학과 전공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즉 특정 영농품목에 있어서는 대학에서의 전공이 재배/사육 영농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화훼와 축산처럼 대학 전공과 연계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학 생들에게 특화된 해당 품목 관련 재배기술 이외에 추가적인 경영관리법과 시장진출방법(판로개척 등) 등 해당분야 특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취농·창업시 초기투자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해당분야 취농·창업자들이 모여 집단 취농·창업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 농가경영시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결과 ‘농지, 자금 확보 등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 장애수준에 대한 응답결과가 평균 3.46으로 나타남
  - 즉, 취농·창업시 초기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한 인적네트워크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실제 해당 네트워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배/사육 영농품목별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그룹을 형성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분담출자하여 취농·창업하도록 하는 지원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당프로그램을 통해 취농·창업하는 경우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의 자금지원 정책 등도 함께 추진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 농업·농가소득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 취농·창업시 예상소득에 대한 응답결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응답 결과사이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남

- 연간 농가소득을 3천만원 이하로 예상한 응답자 비율이 36.7%로 매우 높게 나타나 2014년 기준 농업인 가구 연평균 소득 3,495만원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농가소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농업/농가소득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정 고소득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 역시 필요하지만, 평균적인 농가소득 수준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작물별로 실제 농가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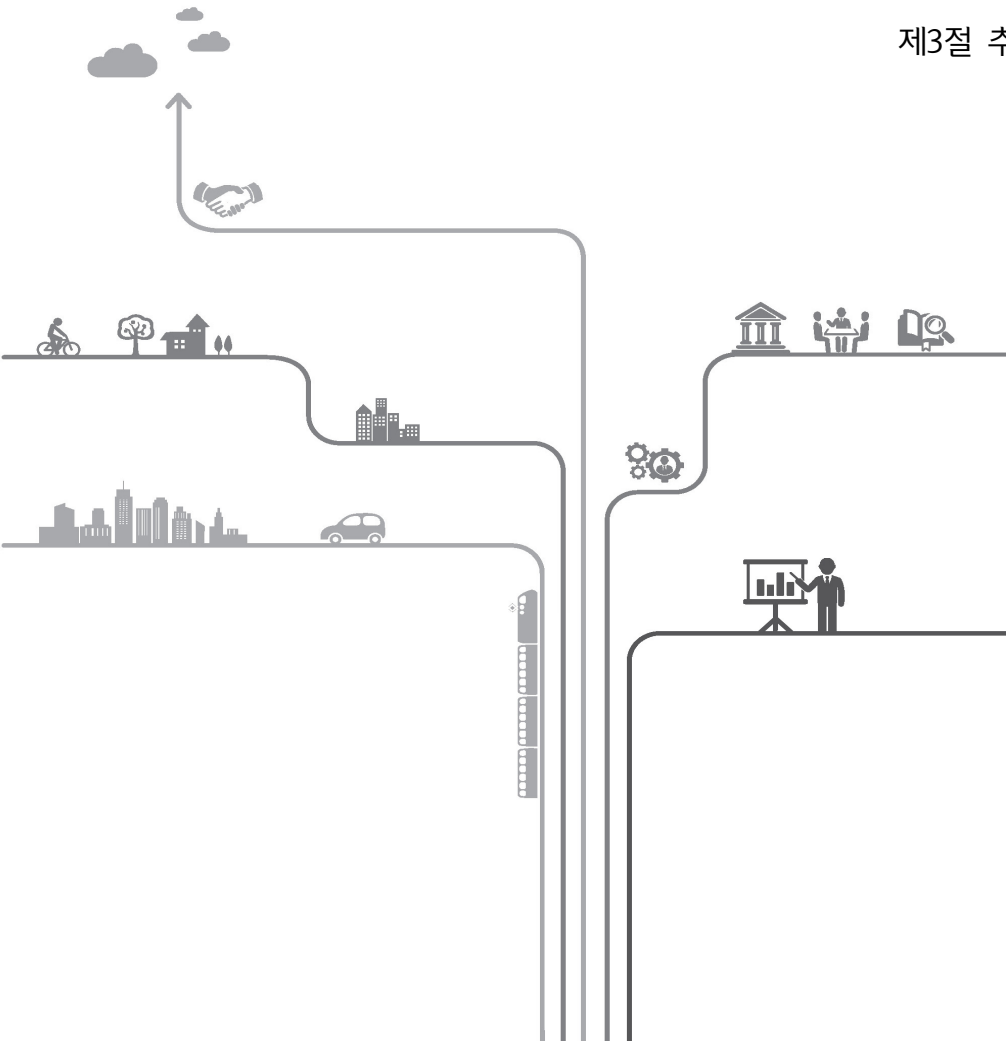
# 제5장

## 전라남도 취농·창업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핵심전략

제3절 추진조직 정비





## 제5장

## 전라남도 취농·창업 활성화 방안

## 제1절 기본방향

## □ 단계별 지원프로세스의 마련

- 취농·창업의 활동 기준에 따른 경로는 취농·창업에 대한 관심·실험단계 - 경영계획수립단계 - 실행단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관심·실험단계는 취농·창업을 생계활동 대안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단계
  - 관심·실험 단계는 농업활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가벼운 체험, 농가활동에 대한 정보 습득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농·창업을 하겠다고 고려하고 있는 예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농가생산을 일정기간 참여함으로써 취농·창업에 대한 결심을 확고히 하게 하는 단계임
  - 경영계획수립단계와 실행단계는 취농·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예비 취농자들을 지원
- 상기 세 가지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내용이 상이하고 단계별로 중요한 지원 영역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계별로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 취농·창업에 대한 통합적 접근 지향

- 청년층 취농·창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제부문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한정될 경우 취농·창업의 유인효과가 제한적일 것임
- 취농·창업은 도시에 익숙한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사회인 농촌에 적응하는 것도 수반됨

- 예를 들어, 집을 구할 때에 도시 부동산 거래와 다른 형태로 진행
- 따라서 취농·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정주공간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수요에 대한 예비 취업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
- 요컨대 핵심적인 귀촌정책과 취농·창업 활성화 정책 간 결합이 필요

□ 전라남도과 시·군 간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 취농·창업에 대한 관심, 계획, 그리고 실행 등의 과정이 단순히 한 지역이나 단일 조직(기관)과 제한되어 나타나지 않음
  - 전라남도로 귀농하는 인구의 대부분은 광주와 전라남북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취농·창업에 대한 관심 지역은 광주, 전라남북도의 모든 시·군에 해당
  - 하지만 취농·창업의 실행은 현재 자기 활동 지역을 떠나서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예비취농자의 지리적 범위가 달라짐
- 따라서 취농·창업에 대한 지원은 시·군 경계를 넘어서 일관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군 간, 시·군과 도청 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또한, 취농·창업에 대한 지원은 준비단계의 지원과 실행단계의 지원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매우 다양
  - 기술 관련 기관, 경영·창업 관련 기관, 교육훈련기관, 대학, 멘토 등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취농·창업 지원 과정에 관여



## 제2절 핵심전략

### 1. 관심·실험단계 지원

#### □ 농업분야 학교의 창업 아이템 발굴 사업

- 사업목표는 농업계 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농수산업 분야 취업률을 제고시키거나 농업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것임
  -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계 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의 비농업분야 취업률이 증가
  - 농업고등학교 재학 중인 비농가학생들은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므로, 농촌과 미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전남 농업계 학생 경진대회 개최
  - 농업계 학생들의 경진대회를 매회 개최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가공 등의 농업 관련 제조업의 새로운 상품 개발을 장려하여 향후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
  - 경진 분야: 종묘 등 농업생산 분야, 농가 식품가공 분야, 농기계 및 설비 분야 등에서의 신제품 및 개량품, 개량기술 등을 경진
  - 매회 1회 정기 개최
  - 수상금 수여 및 사업화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연계 지원

#### □ 농업 분야 학교-농업법인과 연계 강화사업

- 사업목표: 농업계 고등학교·대학교와 전남 도내 농업법인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
  - 농업 분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농업법인의 활동과 비전을 보여주고 세부 관심 분야에 맞게 고등학교 3년 또는 대학 4년 교육과정을 습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구 강진농고)처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정 농업법인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맺고, 졸업생을 안정적으로 취업시키고 있음
  - 예를 들어,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의 친환경농업경영학과는 에시아종묘, 중앙종묘, (주)자연과 미래, (주)아이쿱 생협, 학사농장, 동부한농, 고려바이오, (주)피망하우스, 한국유용곤충연구소, (주)탐진들, (주)바이오리소스, 우리원식품, (주)대한종묘조경, (주)흙살림 등과 취업연계되어 있음
- 사업내용: 농업계 고등학교·농대 - 도내 농업법인 간 체험교육 및 교류행사 지원
- 도내 농업법인들이 농업계 고등학교들을 방문하여 농업법인의 현황과 농업부문의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 증대
  - 농업계 고등학교들의 학생들을 분야별로 묶어서 관련 농업법인들과 연계하여 방학기간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실시
  - 체험교육의 경우 농업법인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동시 시행하여 참여자의 다양화를 도모
- 도내 농업법인 취업박람회 개최
- 사업목표: 농업 분야 일자리 구인, 구직을 동시에 한 장소에서 실시함으로써 취업인력과 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 사업내용 : 전라남도 관내 취업박람회 개최
- 매해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대생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
  - 취업박람회는 농업분야별 농업법인들을 한 섹션별로 그룹화하여 전시, 배치
  - 취업박람회의 개최 시기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여름 방학 시기로 하여 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 ※ 온라인 상에서는 농업법인의 인력 수요를 「전남 취업·창업 종합 포털」에 공개

### □ 예비 진입자에 대한 상담·알선 강화

- 사업목표: 취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적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농수산 분야로의 진입 유도
  - 상담·체험·진입 등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
- 사업내용
  - 상담·강연회의 정기적 개최: 1년에 4번 분기별 개최, 상담의 현실성 및 실효성 확보
  - 상담과정에서 최근 신규 취농자(5년 이내), 관련 지원단체, 선진농가 등을 소개
  - 취농상담과 결부시켜 체험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사례: 일본 도도부현 취농상담센터(박기환·이혜은, 2012)

- 취농관련 자료를 취농상담센터에서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음
- 취농상담센터에서 취농상담회를 개최
- 취농 가이드스(guidance), 신규 취농자의 강연회 등 제공
- 각 지방자치단체의 취농지원정보, 농업법인의 구인정보 등 제공
- 희망자에게 1개월 농업취농체험을 제공

### □ 창업·취업 인턴제 운영

- 사업목표: 농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장년층의 농가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향후 농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
  - 과거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던 농산업 인턴제도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서 청년 창직인턴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해당 창직인턴사업이 중소기업청의 창업 인턴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 중단
  - 그에 따라 농산업 분야에서 인턴제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제도는 없어졌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전라남도가 독자적으로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중앙부처의 농림부에서 별도의 인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농가와 농업법인에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임금의 일부를 지원
  - 농업계 분야의 창업·취업 희망자들이 선진 농업경영을 배울 수 있도록 선도적인 농가 및 농업 법인에 인턴 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6개월의 인턴 취업을 지원하고 인턴 훈련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월 최대 80만원 한도) 지원
  - 농가 당 2인, 농업법인 당 5인까지 채용 가능하도록 지원
  - 과거 농업인턴제와 동일하게, 인턴 연수기관들은 신지식인 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업체로 한정

사례: 농(農)의 고용사업 지원(박문호, 2012)

- 일본에서는 청년의 농업법인으로의 고용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층 차원에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청년의 인턴 월급을 일부 보조
- 농업법인 고용자에 대하여 최장 2년 연간 120만엔 한도 내에서 지원
- 고용취농자는 지원금 월 10만엔을 포함하여 월 16~20만엔의 급여를 받고 있음

## 2. 경영계획수립단계 지원

창업교육사업 실시

- 사업목표: 농수산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예비 신규진입자들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성공적인 농가 경영을 위하여 기존 농업종사자들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

- 예비 신규진입자들은 경영과 기술 모든 분야에서 경험이 미비
- 농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 농업 종사자로서의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로서의 전문성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회계 및 경영위기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자원조달계획, 영농계획과 재원회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 농가에서 필요한 소요 재원 유형, 감가상각비, 용자와 이자부담 등 회계 관련 지식을 교육
  - 이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부 지원사업이 부채로 이어짐

□ 사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농업경영체 경영회계 교육(마상진, 2012)

- 농업회계에 대한 이해와 주먹구구식 농가 경영 관리의 극복
- 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설 농업정책연구소에서 실시
- 소규모 그룹으로 교육 실시(30명 단위, 7일 (야간)교육)
- 교육내용
  - 1일차: 농업회계 이해 및 경영마인드 제고
  - 2일차: 논리적 사고법 트레이닝 / 표준 회계 이해
  - 3일차: 품목 특성 파악을 통한 회계요소 도출
  - 4일차: 품목 특성을 반영한 관리 회계 수립 및 계정 분류
  - 5일차: 프로그램 개발 평가
  - 6일차: 프로그램 실습 / 농업세무회계 이해
  - 7일차: 프로그램 실습
- 특이사항: 교육 강사와 참여자가 협업하여 농가 사정과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자신만의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

□ 종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사업목표: 농수산 분야에 진입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와 핵심 과제에 대한 예비 신규진입자들의 인식을 제고
  - 신규 진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시행착어를 겪을 수 있음

- 사업내용: 농촌 적응과 성공적인 농가 경영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
  - 농가 경영상의 여러 애로사항, 농가경영의 계절별 기회요인과 위협, 품목별·분기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과제 등을 정리
  - 또한, 시장 마케팅, 경영 위기에 대한 대처 및 관리 기법, 정부 지원사업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
  - 농지 및 기계 구입, 농작물 가공, 농산물 유통 등과 관련된 기관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을 제공
  - 관련 대학, 농업기술센터, 연구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기존 지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농촌 적응의 순서, 지역사회 내 작목반 등 커뮤니티 조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읽기 쉽고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개발, 보급
  - 취농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 신규 진입자가 농가경영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사례를 확산

□ 농가경영계획 수립 지원 및 인증제도

- 사업목표: 농가경영 희망자들의 농가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인증함으로써 ‘인증취농자’로 지정하여 영농정착의 성공률을 높이고 향후 지원 근거로 활용
- 사업내용
  - 농가경영계획에서 구체적인 영농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농기계 및 설비, 기술적 지식, 경영적 지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이 무엇이고 향후 자금 동원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자를 전라남도 관내에 취농하려고 하는 49세 미만의 예비 취농자를 대상으로 지원
  - 인증취농자에 대하여 ‘청년농장’, ‘창업멘토제’, ‘취농·창업 자금지원’,

‘생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등 관련 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활용

#### □ (가칭)청년농장 사업

○ 사업목적: 농고·농대 졸업생이 영농정착의 어려움이 없도록 농지와 시설물을 임대지원(최대 2년)하여 조기 영농정착 유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농대·농고 졸업자나 만 49세 미만의 청장년층에서 ‘농가경영 계획’을 인증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지원
  - 선정위원회 : 도,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학교에서 추천 받아 구성
  - 추진 과정: 전남도청에서 사업 부지를 물색하여 예비 신규 진입자들에게 제공
  - 농지와 시설물은 전남도청과 해당 시·군에서 제공하되, 시설물의 구매와 설치는 청년농장사업에 선정된 신규 진입자들이 진행
  - 농지 제공 등과 아울러, 신규 진입자들에게 제과정에 대하여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멘토들을 구성하여 측면 지원(멘토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내 우수농업인을 적극 활용)
  - 사업부지는 지역 내 폐교나 폐창고와 인근 지역 등을 이용 가능(폐교 건물을 임시 주거용으로 제공할 수도 있음)
- ※ 일본 이로가와지구의 정주형 취농프로그램과 유사

#### □ 사례: 폐교 등을 활용한 적응프로그램 추진(박시현, 2010, 재인용)

- 일본 이로가와 지구는 광산 폐쇄, 농림업 쇠퇴 등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음
- 1977년 유기농업 이주 가구인 5개 가구가 지역 조직으로 ‘경인사’를 설립(향후 1991년 이로가와 지역진흥추진위원회가 설립됨)
- 지역주민조직인 ‘경인사’에서 이주 희망자와 농업실습프로그램을 실시
- 1995년 귀농 귀촌 촉진을 위한 거점으로 폐교 교사를 개조하여 바구니고향숙을 만들(중산간집락기능강화등 촉진사업을 적용하여 국가 및 현으로 부터 60%의 보조를 받음)

○ 3개의 취농 프로그램을 실시

- (1) 체험형: 벼재배, 밭일, 산나물채취, 차따기 등 2박3일의 체험메뉴 실시
- (2) 실습형: 3일간의 실습 준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그 후 다양한 기간의 농업실습을 제공
  - 1주에서 1년간의 농업실습을 실시
  - 실습생은 삼림조합, 취업조합, 유기농우회, 무농약야채출하협동조합 및 개인농가 등에서 실습
- (3) 정주형 : 이주희망자들에 한하여 5일간의 정주체험을 제공
  - 체험이 끝나고 이주 확정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정주촉진반이 농가 및 농지 등을 소개해 줌
  - 정주희망자의 입거기간은 1년
  - 그 기간 동안 농가 경영 및 농촌 적응을 하고 농지나 주택을 구매

○ 홈페이지: [http://www.sumikae-nichiikikyoku.net/pdf/wak\\_nach\\_i\\_t.pdf](http://www.sumikae-nichiikikyoku.net/pdf/wak_nach_i_t.pdf)

### 3. 실행단계 지원

창업멘토제 운영

- 사업목표: 농가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멘토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 향상
- 사업내용: 창업 이후 2년 간 멘토를 연결해 줌
  - 창업 이후 약 2년 동안 농가 경영이 안정화단계라 할 수 있음
  - 멘토는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우수 농업인들도 개인 멘토로 포함
  - 특히, 지역 내 은퇴농과 신규 진입자를 연계시켜 충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2014년 기준으로, 충북 보은은 3개월에 150만원을 멘토에게 지원, 경남 하동은 월 5만원을 멘토에게 지원하는 등 지역별 멘토 지원비의 차이가 크며 이는 멘토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보여짐
  - 멘토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장기간 멘토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신규 진입자들에 대해서 안정적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할 때 일회적인 멘토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 빈집·휴경지 등록사업

- 사업목표: 신규 진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주공간 마련과 주요한 생산수단인 농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빈집과 휴경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취농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가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보 구득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 사업내용

- 시·군에서 빈집과 휴경지에 대한 정보를 자체 조사하여 등록하여 포털에 공개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빈집, 휴경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역 내에 있는 농민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에 빈집과 휴경지를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
- ‘전남 취농·창업 종합포털’에 일반적인 지역 정보와 아울러 빈집, 휴경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

□ 사례: 일본의 농지 가옥 등록제도(박시현, 2010, 재인용)

- 일본 이로가와 지구에서 농지가옥 등록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
- 지역 청년회가 1992년에 창간한 지역소식지에 휴경지와 빈집을 등록
  - 등록된 농지와 가옥정보는 귀농 귀촌자에게 제공
  - 지난 30년간 신규 귀농자는 57세대 약 150으로, 이곳 주민의 1/30에 해당

□ 「전남 취농·창업 종합 포털」 운영

- 사업목표: 취농·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전라남도의 지역별 농업 특성과 농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신규 진입자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전남 취농·창업 종합포털’을 운영
  - － 취농에 필요한 정보들(지역별 농업 특성, 자금 지원프로그램, 휴경지 및 농지, 빈집 등)를 제공
  - － 전라남도 농업법인에 대한 정보와 구직게시판 운영
  - － 취농·창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과 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시

□ 취농 자금지원

- 사업목표: 농가 경영을 시작한 이후 일정 기간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포기률을 감소시키고 농가 경영의 지속성을 확보
- 사업내용
  - － 자금 지원은 생활비 보조와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
  - (1) 생활비 보조 지원
    - － 농가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영 초기(2년~3년)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조
    - － 농가경영계획을 승인받은 자에 한해서 실시
    - － 농업인턴제와 유사한 생활비(월 8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필요한 생활비는 자신의 창업자금이나 지역 내 다른 농가에 취업함으로써 보전하게 함

□ 사례: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박문호, 2012)

- 일본에서는 취농 후 정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급부금을 지원
- 5년 이내 연간 150만엔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조건: 45세 미만으로 경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친 이후 지원
  - 부모 경영승계농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2) 농지 및 농기계 등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

- 기계나 시설을 구입비용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 실시
- 전라남도가 별도의 농업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의 융자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추진하되, 경영계획을 인증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진행
- 농지, 농기계,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3억원 한도 내에 융자
- 대출금리 : 창업 2%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은퇴농 경영승계 지원사업

- 사업목표: 은퇴농과 신규 진입자를 연계시켜 농촌의 휴경지를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경지가 완전 또는 부분 휴경지가 되고 있어 농촌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음
  - 신규 진입자는 농지 확보와 농가 경영에 대한 지식 확보 및 네트워크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 내용
  - 은퇴농과 신규 진입자를 연계시키기 위해 은퇴예정자를 모집하고, 은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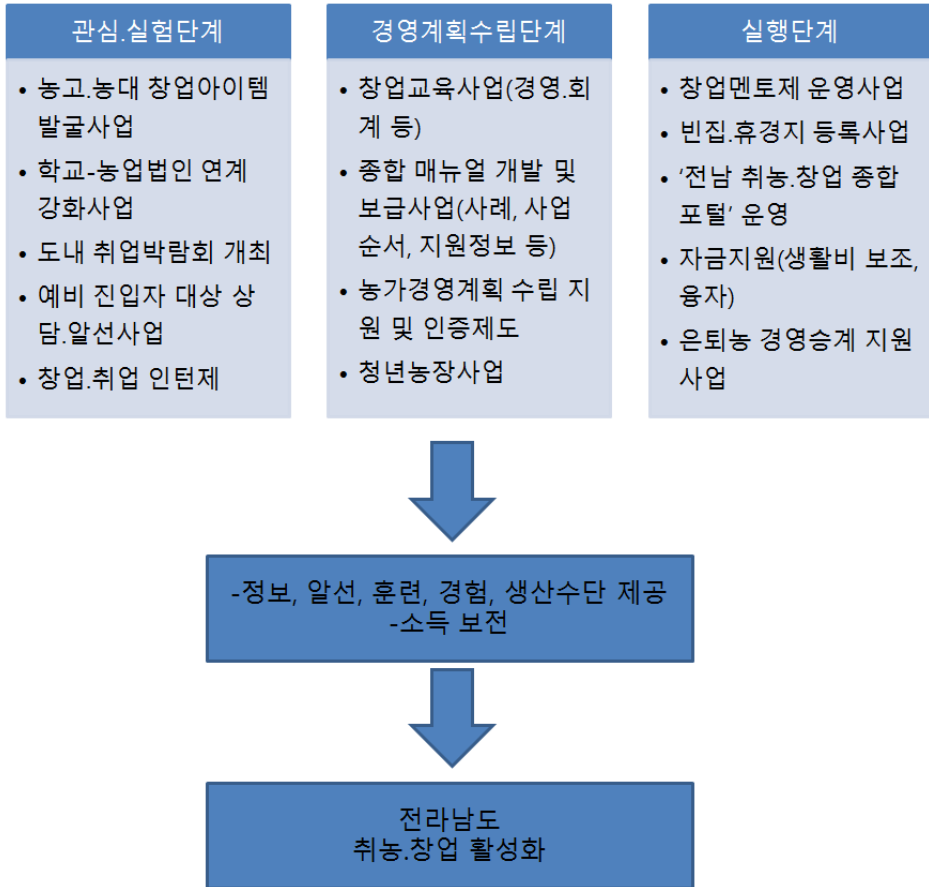
예정자와 신규 진입자 간의 만남을 주선

- 은퇴농과 신규 진입자 간의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주선
- 농지와 농기계 등의 생산수단을 한꺼번에 신규 진입자에게 완전 판매 또는 부분 판매
- 부분 판매란 농지의 일부를 부분 판매하면서 일정 기간 지날 경우 완전 승계로 넘어가는 것을 예정할 수 있음
- 은퇴농이 계속 같은 지역에 머물 경우에 은퇴농을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간접적인 편익도 기대할 수 있음

□ 사례: 미국의 팜링크(FarmLink) 지원 사업(마상진·박성재·김강호, 2011)

- 미국 각 주의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은퇴농의 경영승계를 지원하고 신규 진입을 확보하기 위해 팜링크를 지원하고 있음
- 팜링크는 농가 경영을 계획하는 예비 취농인과 은퇴농을 연계시켜주는 비영리조직
  - 팜링크는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
  - 팜링크는 은퇴농과 예비 취농인과 연계를 통하여 농지를 지속적으로 농업생산할 수 있도록 함
  - 팜링크 소속 농촌지도인력들이 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
  - 또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통합 제공
  - 토지, 농기계, 종묘, 회계 및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알선

<그림 18> 전남 취농·창업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핵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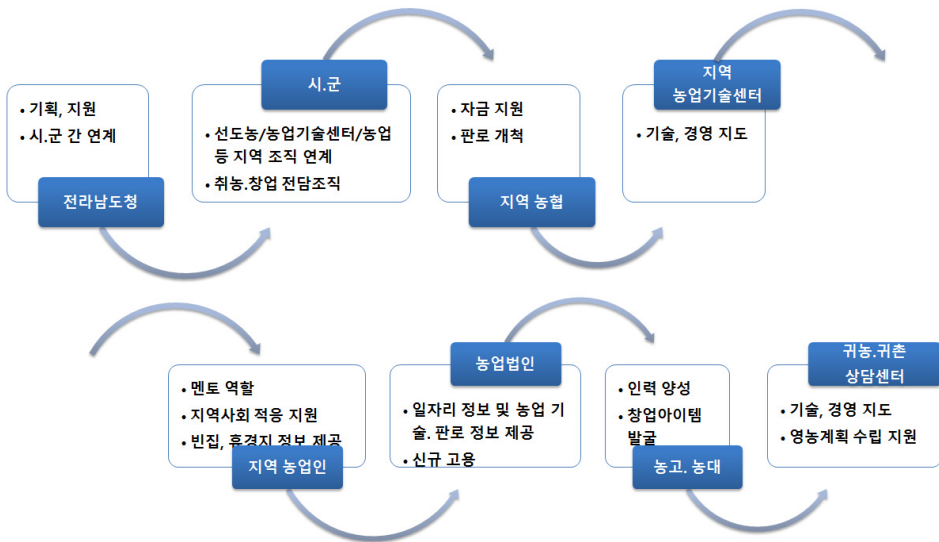


### 제3절 추진조직 정비

- 시군별 취농·창업 전담조직 설치
  - 기존 농업인에 비하여 신규 진입자가 겪는 애로사항과 지원 수요가 상이함
  - 신규 진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농·창업에 대한 전담 조직을 설치
    -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신규 진입자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시·군이 인지할 수 있게 됨
    - 현재는 상당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침이나 평가기준, 지원기준 등의 변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전라남도 도청과 시·군 내에 취농·창업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취농·창업에 대한 지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신규 진입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
  - 특히 시·군 전담조직은 지역내 농협, 농업기술센터, 지역 내 우수 경영인 등 선도 농업인 및 농가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내에 유입하는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
- 취농·창업 관련 지원 조직과 지자체 간 연계 강화
  - 취농·창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민간, 그리고 지원 조직 간 연계가 필수적임
  - 각 관련 기관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취농·창업을 활성화
    - 전라남도청: 도 내에 지원 계획을 수립, 중앙정부 및 전남도청의 지원 정보를 확산, 전남도 내 시·군의 빈집 등 지역 농업 정보의 종합적 제공, 시·군 간 연계 및 취업 알선
    - 전라남도 시·군: 지역 정보를 전남도 등에 제공 및 관리, 시·군 내 관련 조직의 연계, 지역 농업인과 신규 진입자 간의 연계 주선, 자금 지원 등

- 지역 농협: 지역 내 신규 진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판로 알선
- 지역 농업기술센터: 지역 내 신규 진입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
- 기존 선도농가 및 우수 경영인: 신규 진입자의 지역 사회 내 정착 및 적응을 지원, 지역 내 휴경지 및 빈집에 대한 정보를 관청에 전달
- 농업법인: 구인 정보, 현재 농업법인의 현황과 미래 농업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 농업고등학교: 농가 및 농업법인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창업아이템을 발굴
- 농업대학: 미래 농업인 양성과 연구인력 양성, 새로운 기술 및 신상품을 제공, 창업아이템을 발굴
- 귀농·귀촌 상담센터: 신규 진입자의 영농계획 수립 지원 등 컨설팅 제공

<그림 19> 전라남도 취농·창업 지원 추진 시스템



**부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귀농·창업 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타
강원	<p>이 조례는 강원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도내에 인구유입 촉진을 통하여 농어업·농어촌에 일 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li> <li>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li> <li>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li> <li>4. “귀농인”이란 다른 시·도나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li> <li>5. “귀촌인”이란 다른 시·도나 도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도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농림수산 및 자연자원 등을 생산 및 활용하는 농어촌 연관 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li> <li>6.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li> <li>7. “귀농·귀촌인의 집”이란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어촌체험 후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li> <li>8. “농어업경영”이란 농어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li> <li>9. “귀농인정착지원등”이란 귀농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정착 지원금 또는 귀농사업 지원을 말한다.</li> </ol>	<p>제3조(도의 책무) 제4조(귀농·귀촌인의 책무) 제5조(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심의) 제7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제8조(지원사업) 제9조(귀농인정착지원등 지원) 제10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준용) 제13조(시행규칙)</p>



구분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타
경기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정착·육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을 목적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li> <li>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li> <li>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li> <li>4. “귀농인”이란 다른 시·도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li> <li>5.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li> </ol>	<p>제3조(도지사의 책무)</p> <p>제4조(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p> <p>제5조(육성·지원계획 심의)</p> <p>제6조(귀농 지원센터 운영)</p> <p>제7조(지원사업)</p> <p>제8조(귀농인의 관리실태 조사 등)</p> <p>제9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p> <p>제10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p> <p>제11조(시행규칙)</p>
경남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도내 농어촌 지역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농어업·농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농어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li> <li>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li> <li>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li> <li>4.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도내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li> <li>5.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생활을 목적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li> </ol>	<p>제3조(도지사의 책무)</p> <p>제4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p> <p>제5조(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p> <p>제6조(지원대상 사업)</p> <p>제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회의 심의)</p> <p>제8조(귀농어업·귀촌 지원센터 운영)</p> <p>제9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p> <p>제10조(준용)</p> <p>제11조(시행규칙)</p>
경북	이 조례는 농촌지역에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을 통해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p>제3조(도의 책무)</p> <p>제4조(귀농인의 지원)</p> <p>제5조(귀농인의 교육)</p>

구분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타
	미래 농업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 귀농하는 농업인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경상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6조(귀농인의 권리실태 조사 등) 제7조(시행규칙)
울산	이 조례는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을 통해 미래 농업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촌외 지역 거주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고 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귀농인의 책무) 제5조(귀농인 자원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8조(귀농인 창업보육 및 영농교육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제10조(정착 지원) 제11조(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전남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귀농인을 유치하여 미래 농업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정착과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타 시·도(시·군)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귀농인의 책무) 제5조(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자원사업) 제7조(사후관리) 제8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제9조(시행규칙)

구분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타
전북	<p>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라북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li> <li>2.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li> <li>3. "귀농인"이란 다른 시·도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도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li> </ol>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귀농인의 책무) 제5조(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등) 제7조(지원센터 운영) 제8조(지원대상사업) 제9조(관리 등) 제10조(시행규칙)</p>
제주	<p>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li> <li>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li> <li>3. "농어촌"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li> <li>4. "농어업경영"이란 농어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li> <li>5. "귀농인"이란 다른 시·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제주자치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li> <li>6. "귀촌인"이란 다른 시·도나 제주자치도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세대주가 제주자치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li> </ol>	<p>제3조(책무) 제4조(지원사업) 제5조(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회의) 제11조(수당 등) 제12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3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제14조(준용) 제15조(시행규칙)</p>

구분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타
충남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가족이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응원과 재화 및 영농·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다른 지역"이란 도 관할구역 밖의 도시지역을 말한다. 5.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귀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육성·지원계획 심의) 제5조(귀농어업 정보제공)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정착자금 지원) 제8조(시설 보조) 제8조의2(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등) 제8조의3(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 제8조의4(판로 및 유통 지원) 제8조의5(신용보증 알선) 제8조의6(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사기조작 등) 제9조의2(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0조(사후관리)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등) 제12조(시행세칙)
충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제29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귀농인의 책무) 제5조(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제7조(귀농 정보제공)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9조(정착자금 지원) 제10조(시설보조) 제11조(사후관리) 제12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제13조(시행규칙)

## 【참고문헌】

- 강대구(2005),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 연구」 농림부 정책과제보고서.
- 강대구(2006a),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한국농업교육학회.
- 강대구(2006b),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 연구」, 농림부.
- 강대구(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한국농업교육학회.
- 강대구(2010), “귀농, 귀촌의 현황과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7(4),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경덕·홍준표·임지은(2012),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부성(2012),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교육체계 구축 개선방안”,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부성(2012),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교육체계 구축 개선방안”,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2007),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농촌경제」 30(4), 105-126.
- 김정섭(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정섭(2012),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세미나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2012), “귀농·귀촌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쟁점들”,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체계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김정호·마상진(2005),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2012), 「지난 해 귀농·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2012.2.23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09), 「귀농·귀촌 종합대책」(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 「귀농·귀촌 지원정책」.
- 농촌진흥청(2014), 「귀농·귀촌 지원정책 길라잡이」.
- 마상진(2012), “귀농·귀촌자의 영농실태와 교육요구 분석”,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김강호(2013), “신규 취농 진입장애요인과 영농 성과의 구조적 관계 : 창업농과 승계농의 비교”, 『농촌경제』, 33(4): 1-28.
- 마상진·박성재·김강호(2011), 「농림수산식품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정기환(2008),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기환·이혜은(2012), “일본의 신규 취농 현황과 지원제도”, 『세계농업』 제139호: 19-30.
- 박문호(2012), “일본 현단위의 귀농·귀촌에 관한 사업 및 지역활성화 와의 연계실태 및 사례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보고서.
- 박시현(2010), “일본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귀농·귀촌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 출장보고서.
- 박시현, 최용욱(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손상락(2012),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오병기(2013), 「수도권 출향민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 지원 10대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 이수행·이상훈(2012), “한국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 귀농·귀촌”, 『이슈&진단』, 경기개발연구원, 제42호.
- 전남수(2010), 「귀농 활성화를 위한 경남의 정책방향」, 경남발전연구원 ISSUE PAPER: 46호.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2015), 「2015년도 농업인 교육 계획」.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2015), 「2015년도 농업인 교육 계획」.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2015), 「2015학년도 전남생명농업대학 교육운영계획 및 신입생모집요강」.
- 전라남도(2014), 「2014년 전라남도 통계연보」.
- 채상현(2013), “귀농정착 현황 및 귀농정착 성공요인 분석: 귀농귀촌교육수료생 대상 영농정착실태조사 사례 중심으로”, 「2013년도 한국농산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통계청, 각년도, 「귀농·귀촌인 통계」.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통계청보도자료.

황정임(201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쟁점”,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체계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흥군농업기술센터, <http://farm.goheung.go.kr/>

광양시농업기술센터, <http://www.gwangyang.go.kr/jares/>

담양군농업기술센터, <http://atc.damyang.go.kr/>

법제처, <http://www.law.go.kr>

순천시농업기술센터, <http://www.suncheon.go.kr/sca/>

신안군농업기술센터, <http://jares.shinan.go.kr/>

여수시농업기술센터, <http://ysagr.yeosu.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장흥군농업기술센터, <http://jares.jangheung.go.kr/>